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CNI세미나 2020-032

2020. 8. 7.(금) 09:00~
농협충남본부 대회의실

지속가능한 충남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및 2021년 충남 농정시책 구상 합동워크숍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및 2021년 충남 농정시책 구상 합동워크숍

□ 토론회 개요

○ **(때·곳)** ‘20. 8. 7.(금) 09:00 ~ 11:50 / 농협충남지역본부 대회의실

○ **(참석)** 51명

- 농림축산국장, 각 과장·팀장(39), 충남연구원(8), 외부전문가(3)

○ **(내용)** 2021년 충남 농업·농촌분야 주요 시책구상

□ 진행 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09:00~09:02	2′	▸ 개회	사회자
09:02~09:10	8'	▸ 인사말씀	농림축산국장→ 충남연구원
09:10~10:00	50'	▸ 농림축산국 시책구상 발표	각 과장
10:00~10:40	40'	▸ 충남연구원 시책구상 발표	충남연구원
10:40~11:00	20'	▸ 전문가 자문	전문가
11:00~11:40	40′	▸ 종합토론	참석자
11:40~11:50	10′	▸ 종합정리 및 폐회	농림축산국장 (사회자)

12:00~13:00	60'	▸ 오찬	참석자

목 차

Ⅰ. 농림축산국 시책구상보고 ····· 1

1 농업정책과 ····· 2

2 농식품유통과 ····· 12

3 식량원예과 ····· 19

4 농촌활력과 ····· 30

5 산림자원과 ····· 44

6 축산과 ····· 49

7 동물방역위생과 ····· 56

Ⅱ. 충남연구원 시책구상보고 ····· 61

Ⅲ. 전문가 토론문 ····· 93

Ⅰ. 농림축산국 시책구상보고

농업정책과

Ⅰ 신규 추진시책

1	해외 결연 지방정부 미래농정 포럼	한국판 뉴딜대응	3대 위기 극복 시책	기타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필요성

○ 우리도와 결연을 맺은 해외 지방정부의 농업정책 추진사례 공유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과 연대, 공동 번영의 토대 구축 계기로 활용

○ 해외 지방정부간 교류가 날로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외교를 보완하고 해외 결연 지방정부간 교류 협력의 장 마련

□ 추진방향

○ **(상생발전)** 참여 지방정부의 농업·농촌문제 공동인식 및 상생발전 협력

○ **(참여확대)**

↳ 해외) 해외 지방정부 참가 확대로 포럼의 역할과 위상 강화

민간) 행정주도에서 연구기관·학회 등 민간참여 확대, 민관 협치 실천

지자체) 전국 자치단체로 참여 확대, 전문 국제농업포럼으로 발전

○ **(과제발굴)** 포럼을 통해 현안과제 발굴, 정부정책 건의 등 생산성 제고

□ 포럼개요

○ 명　　칭 : 「해외 결연 지방정부 미래농정 포럼」

○ 주　　제 : 참석국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자체 선정

○ 시　　기 : 2021. 9 ~ 11월중, 1박2일

○ 운　　영 : 충남연구원, 한국농식품정책학회, 농업기술원 등 3~4개 세션별 운영

○ 초청대상 : 1,000여명(우리도 해외결연 지방정부 12개국 28개 단체 등)

○ 소요예산 : 3억원(도비)

○ 내　　용 : 미래농정 등 해당 분야 전문가와 토론 및 발전방안 모색

□ 기대효과

○ 각국 미래농업 정책·경험·비전 공유 등 상호교류 및 협력 강화

2	농·특산물 직거래 '착한장터' 운영	한국판 뉴딜대응	3대위기 극복시책	기타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도,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도울 수 있는 '농산물 착한소비운동' 추진

□ 시책개요

○ 사 업 명 : 농특산물 직거래 '착한장터' 운영

○ 사업기간 : 2021. 1. ~ 12. / 2회

○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

○ 참여대상 : 농업인단체, 농업인(농가) 등

○ 사업내용 : 농업인단체 중심 충남도 농특산물 도시민 판매 홍보

□ 주진계획

○ 충남 농업인단체와 협력, 세부계획 수립 및 본예산 편성

- 소비자 유동 인구가 많은 대도시 또는 휴게소 등에서 '착한장터' 개최

※ 개최시기는 농산물 판매상황 및 수확시기 등을 고려, 추진시기 결정

- 도내 우수 농.특산물 30여 품목(시군별 2품목)을 10~30% 저렴하게 판매
- 도시 소비자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생산자명, 연락처 표시
- 판매품목 홍보물 제작, 차에서 구매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 등 판매

□ 기대효과

○ 코로나19로 시장침체에 따른 농산물 소비촉진과 충청남도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도시 소비자에게 홍보.판매

3	청년농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한국판 뉴딜대응	3대위기 극복시책	기타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추진배경

○ 이농현상, 농촌의 고령화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위협

※ 충남 농촌인구 고령화 추이(65세 이상) : '10) 33.9% → '15) 41.5% → '19) 51.3%

※ 충남 청년농업인 추이(20~39세) : '10) 13%(51,574명) → '15) 10%(30,167명) → '19) 8%(20,104명)

○ 4차산업혁명의 신기술 도입과 도농교류 활성화 등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소인 동시에 청년농어업인 성장의 기회 제공

○ 청년인력을 농어업·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유인책 필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가칭)청년농어업인 희망 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20이상~40세미만 경영체 등록된 청년농어업인

- 대상인원 : 3,331명(농업 3,001, 어업 330)

○ 지원형태 : 청년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문화, 체육시설 이용 바우처 지급

○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년

○ 총사업비 : 6.7억원

- 재원별 : 도비2.7(30%), 시군비4(70%)

□ 향후계획

○ 카드발급관련 금융기관 협의

○ 도민대상 명칭공모 충남넷 온라인 투표 추진

4	여성농업인 쉼터 조성	한국판 뉴딜대응	3대위기 극복시책	기타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추진배경

○ 농촌사회에서의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

- 지방소멸위험을 감소시키는 농촌공동체에서 재생역할
- 도시와 농촌을 잇는 가교역할

○ 여성귀촌인의 빠른 농촌 적응·정착을 돕는 멘토-멘티 활동 증가

○ 여성농업인의 여가·문화·영농정보 교환의 소통공간과 건강관리 기능 필요

<농작업 중 여성농업인이 겪는 어려움>

▸ **불균형 농작업으로 근골격계 질환 유발** → 건강관리쉼터 필요

▸ **영농기술 습득, 문화·여가 활동 등 소통공간 필요**
→ 쉼터 조성 시 정보교환 소통공간을 주요기능으로 설치

▸ **급식 및 간식 그리고 청결관리 등 휴식 공간 필요**
→ 광범위한 농작업공간을 고려 在家 해소

▸ **영·유아보육 지원 필요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등 활용**

□ 사업개요

○ 목　　적 : 여성농업인의 소통 및 건강관리위한 공간마련

○ 사 업 량 : 3개소(시범사업 실시)

○ 지원금액 : 개소당 2천만원

○ 지원내용 : 쉼터 집기 및 건강관리 시설구입 및 공간 조성비 등

○ 총사업비 : 6천만원

- 재원별 : 도비1.8(30%), 시군비4.2(70%)

□ 향후계획

○ 중·장기적 ⇨ 연구용역 추진중인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 쉼터조성계획 반영

○ 단 기 적 ⇨ '21년 3개소 시범사업 실시 후 시책사업 전환

Ⅱ 보완·발전시켜 나갈 기존 시책

1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지원

확 대	축 소	보 완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필요성)** 충남 농어업회의소 활성화를 통한 거버넌스 농정시스템 안정 정착
- 농어업인 조직의 대표성·책임성 강화를 통한 정책결정 정당성 확보

○ **(사업개요)** 계획수립, 교육, 현장견학, 의견수렴 등 설립 및 활성화 지원
-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립 : 9개소(도1, 시군 8)
  * **기설립 6개소**(도, 아산, 당진, 금산, 부여, 예산), **설립중 3개소**(서산, 논산, 홍성)

○ **(보완발전)** 농어업회의소 전 시·군 확대(9개소 → 11개소, 서천·태안 '20년 추가 선정)
  * 미 설립 시군(천안, 공주, 보령, 계룡, 청양)에 대한 설립 유도
- 설립중인 시·군 회원모집, 창립총회, 설립등기 등 조속 설립 촉구
- 기설립 시·군 회원확대, 농정정책 발굴 제안 등 운영활성화
  * 소요예산 : 11개소, 520백만원(도비 226, 시군비 294)

2 3농정책 위원회 구성.운영

확 대	축 소	보 완
예 산 사 업	비예산사업	

○ **(필요성)** 민선7기 3농정책 추진과 연계한 3농정책위원회, 분과 팀 조직 전면 개편으로 새로운 추진 동력확보 및 농어업에 대한 국민 공감

○ **(구성개요)**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
- 농림어업 유관기관 단체 대표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42명/ 임기 2년)
  * 분과위원회는 8개 분과위 10팀 245명 구성・운영 중
- 농정현안 대응방안 협의, 실행방안 자문, 농정전반 연구.검토 및 대안제시

○ **(보완발전)** 민선 5~7기 전반기 추진되어온 3농정책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되 대두된 문제점을 개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모색
- 3농정책위원회 위원수 변경 : 42명 → 30명 내외
- 3농정책 분과위원회 : 8개 분과위 10팀 245명 → 8개 분과위 150명 이내

⇨ 새로운 농정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위주로 위촉

3 미래농정포럼 정례화

확 대	축 소	보 완
예 산 사 업	비예산사업	

○ **(필요성)** 농업·농촌 현실문제 진단 및 미래 발전과제 도출을 위한 농업 전문가 등 참여 정책포럼 정례화(매년) 필요

○ **(시기·참여)** 매년 1분기(2~3월) 개최 / 도·시군·유관기관단체·전문가 등

○ **(활용)** 도출된 제안사항은 道 장단기 농정시책구상에 적극 반영 추진

※ '2020 충남미래농정 포럼' 개최('20.2.23. / 대회의실) / 36개 과제 제안

4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확대·개선

확 대	축 소	보 완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추진배경)** 동지역 여성농어업인의 소외감 해소 등 형평성 있는 복지정책 필요 및 증가하는 복지수요 대응

○ **확대·개선 '동'지역 확대 및 자부담 폐지**

- 사업량·재원 : 94,000명('20년 85,000명, 9,000명 증) / 188억원
  - ▸ 재원별 : 도비56억4천(30%), 시군131억7천(70%)

※ (현재)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대상, 3만원 자부담 포함한 행복카드 지원

5 빗물활용 농업용수확보사업 확대·개선

확 대	축 소	보 완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그동안)** 부여, 홍성군 대상, '20 빗물활용 농업용수확보사업 추진

- 빗물처리 및 저장 시설 설치하여 농업용수로 재활용(100백만원)

○ **사업 확대 방안**

- 사업위치 : 15시·군 수요조사 후 대상지 확정
- 사업기간 : 2021. 1. ~ 12.
- 소요예산 : 200백만원 (1개소당 50백만원 / 4개소 추진)
- 확대개선 : 관정에 의한 용수공급에 지장이 있는 지역 주민의 호응과 관심이 높고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대상지 확대하고 사업성과분석에 의한 개선방안 마련 후 사업추진 필요

6 충남형 사회적 농업 육성 활성화

확 대	축 소	보 완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보완·발전)** 충남형 사회적농업 사업규모 확대 및 홍보로 적극 육성

- '20년) 4개소 → **'21년) 6개소('20년 선정된 4개소 지속 지원 및 2개소 추가 선정)**

↳ (천안 1) 천안청년농부/ (논산 2) 에이블, 같이 함께/ (홍성 1) 장곡면 2030

※ 소요예산 : 6개소, 480백만원(도비 240, 시군비 240)

- 안내서 제작·배포 등을 통하여 사회적 농업의 의미·가치 등 적극 홍보

⇨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시범사업을 인큐베이팅 사업화* 하여 정부(농식품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도록 활용

*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하여 빠른 시간에 소기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

Ⅲ 일몰 사업

1 농지보전관리지원사업

○ 농지보전관리를 위한 시군담당자 현지확인 출장여비 지원사업이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시 여비지원사업 지양 권고

※ '20년 사업비 : 28,500(도비)

○ 2020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결과 : 매우 미흡

- 2019년 예산현액(30백만원) 대비 집행액 : 21,630천원(집행율 72.1%)

※ 2017년도부터 4년간 지원하였으나 사업성과 평가결과 59점(D등급 판정)

2 농촌 가치공감 현장체험 아카데미

○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 현장(생산·유통·관광·시설 등)에 방문하여,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체험하고 이해도를 높이고자 추진

-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기타사업과의 유사·중복(워크숍, 아카데미 등) 등으로 사업 일몰

※ '20년 신규사업 : 4,500천원(도비)

붙임 **주요사업비 조서**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해외결연 지방정부 미래농정 포럼	1식	3		3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지원	11개소	5.2		2.3	2.9	
농특산물 직거래 착한장터 운영	1식	0.5		0.5		
청년농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3,331명	6.7		2.7	4	
여성농업인 쉼터 조성	3개소	0.6		0.2	0.4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94,000명	188		56	132	
빗물활용농업용수확보사업	4개소	2		1	1	

농식품유통과

Ⅰ 신규 추진시책

1	농식품 온라인 수출 인프라 구축지원	한국판 뉴딜대응	3대위기 극복시책	기 타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현황 및 여건

○ 코로나19가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인삼류, 기능성 식품 등의 수요는 증가한 반면에 이동제한으로 해외마케팅 중단, 물류지연 등 애로 사항 발생

○ 코로나 19확산으로 식품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구매 보편화

○ 지역의 대학생, 다문화가정 등의 인력을 활용한 농산물 수출 전문 인력 육성 필요

□ 사업개요

○ **(사 업 량)** 10개기업 내외/ **(사 업 비)** 200백만원

○ **(지원대상)** 도내에서 농식품을 수출하는 농가 및 수출업체

○ **(지원내용)**

-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상품페이지 제작 등 디지털 경쟁력 기반 구축
- 국가별 유력 온라인 몰 한국관 입점 및 온라인 판촉 지원
- 충남 농식품 수출 코디네이터* 육성

※ 수출 코디네이터 : 수출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수출전문 직원

○ **(사업수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추진계획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계획 수립 : 2020. 12월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수출코디네이터 선발 및 교육 : 2021. 1월

○ 온라인 몰 연계 상품설명서 제작 및 홍보판촉 추진 : 2021. 2월

○ 온라인 입점 및 판매성과, 수출실적 점검 : 2021. 9월

□ 기대효과

○ 내수기업의 온라인 해외직판을 통한 충남 농식품 수출확대

○ 지역 대학생 및 다문화가정에 이주자의 일자리 창출 및 농가소득 향상

2	충청남도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구축	한국판 뉴딜대응	3대위기 극복시책	기 타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체계로서 광역먹거리통합센터를 조성하여 고령·소농의 생산·판로 안정과 먹거리 복지향상, 공공급식 조달체계 구축 실현

□ 현황 및 여건

- ㅇ **(생산)**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생산의 지속가능성 저하
- ㅇ **(유통)** 도내 생산 농산물의 관내 유통 소비활성화 필요
- ㅇ **(가공)** 지역원재료 사용 가공품목 확대를 위한 공공급식 조달강화
- ㅇ **(소비)**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등 공공급식의 로컬푸드 확대

□ 사업개요

- ㅇ 사업목적 : 도 단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구축으로 지역 먹거리 교육·체험·홍보·소비 등을 종합관리하는 통합플랫폼 조성
- ㅇ 사업기간 : 2021~2023년 (잠정)
- ㅇ 총사업비 : 18,5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ㅇ 주요기능 :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직거래물류센터, 교육·체험 농장, 학습전시관, 홍보관, 생태공원, 로컬푸드 식당 등

□ 세부 추진계획

- ㅇ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 과 연계한 광역먹거리센터 사업비 확보('20. 12.)
- ㅇ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기본·실시설계('21. 12.)
- ㅇ 공사 착공 및 사업 추진('22.~'23.)
- ㅇ 광역먹거리통합센터 준공 및 오픈('23. 12.)

□ 기대효과

- ㅇ 시·군 푸드통합센터와 연계한 광역단위 공공급식 조달체계 구축
- ㅇ 소비자에게 먹거리, 볼거리, 체험, 힐링, 영양 교육 등 제공으로 생산부터 유통, 홍보, 소비까지 선순환 구조 정착
- ㅇ 친환경농식품 소비 활성화 및 친환경 가치 확산

Ⅱ 보완·발전시켜 나갈 기존 시책

1 對美 수출 배 검역봉지 지원사업

확 대	축 소	보 완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對美 수출 배 검역봉지 지원사업

○ 사 업 명 : 對美 수출 배 검역봉지 지원사업

○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 추진배경 : 수출물류비 폐지 대응 신규지원사업 도입 필요

※ 수출과정상에 위생 및 검역사항은 WTO에서 허용하는 보조 도입

○ 지원대상 : 對美 배 수출단지(천안, 아산, 논산) 소속 농가

○ 지원내용 : 위생 및 검역요건 이행을 위한 對美 수출 배 봉지 지원

2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농산물 마케팅 추진

확 대	축 소	보 완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현황 및 필요성

○ 충남오감, 시군 통합마케팅 통합물류체계 통한 유통시스템 구축('20년목표, 4,550억원)

○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온라인 구매, 지역 내 소비에 따른 지역마트 급부상 등 새로운 유통에 대응 새로운 유통 마케팅 전략 필요성 대두

○ 사 업 비 : 730백만원(도비)

□ 추진계획

○ **도내 농산물 지역마트(로컬) 공급 확대**

- '20년 : 46매장(농협36, 롯데10) → '21년 : 69매장(농협36, 롯데10, 이마트7, GS리테일16)

○ **물류센터 입고(업체배송)형 농산물 온라인 판매업체(쿠팡, 마켓컬리) 납품확대**

- '20년: 쿠팡 200억(목표) → '21년: 300억(쿠팡 250억원, 마켓컬리 50억원)

○ **농사랑**(도 쇼핑몰) **마케팅 확대를 위한 플랫폼 다양화**

- B2B플랫폼(대량 납품), V커머스(상품 영상화), 통신사(SKT, KT) 연계 홍보채널 도입

⇨ **소비 트랜드 변화에 전략적 대응으로 산지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

3 충남오감 유통활성화 자금(자조금) 조성

확 대	축 소	보 완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현황 및 필요성

○ 그동안 충남오감·시군 통합마케팅 등 조직화에 주력해 왔으며, 지속성장 체계 마련 위한, 유통시장별 자율적 수급조절 필요성이 대두

○ 전국최초 충남오감(딸기) 유통형 자조금 도입('20년)으로, 자립 가능한 산지 육성 기틀 마련 * 충남오감(딸기) 유통 활성화 사단법인 설치 및 협의체 구성 운영

○ 사 업 비 : 120백만원(도비 30, 시군 30, 자담 60)

□ 추진계획

○ **시범도입('20) 품목인 딸기 유통활성화 자금(자조금) 정착**

- 자금 조성 8억원(보조4, 거출4) / 사무국 설립 / 13농협, 713농가 참여
- 품질개선, 분산출하, 수출전략, 농가최저 비용 지원 등 자금집행

○ **'21년 충남오감 품목 중 필요품목 추가 조성(포도)**

- 전국단위 자조금 조성('20년 경북주도)으로 우리도 주도권 확보 필요
- 우리도 포도생산량 11천톤, 1300농가로 자조금 거출 및 관리 용이

⇨ **2030까지「농가 스스로 하는 생산 유통 조절 시스템」완성, 소득 안전성 확보**

4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확 대	축 소	보 완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생산농가 및 소비자 조직화, 직매장 홍보, 판매 마케팅 등

○ **(필요성)** 모든 농산물에 PLS 확대적용, 생산자의 농약사용 규정준수 필요

○ **(개 요)** 직매장 입점품목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성검사 실시

○ **(재원조달)**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기능보강사업 축소예산 활용

- 사업비 : 800백만원(도비 200, 시군비 440, 자담 160)
- 사업량 : 도내 로컬푸드직매장 40개소

붙임 **주요사업비 조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20,550	9,250	10,610	470	220
농식품 온라인 수출 인프라 구축지원	10개기업	200		200		
충청남도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구축	1개소	18,500	9,250	9,250		
對美 수출 배 검역봉지 지원사업	1식	200		200		
포스트코로나19 대응 농산물 마케팅 추진	3식	730		730		
충남오감 유통활성화 자금 조성	1천여농가	120		30	30	60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40개소	800		200	440	160

식량원예과

Ⅰ 신규 추진시책

1 밭 식량작물 거점센터 육성

한국판 뉴딜대응	3대위기 극복시책	기 타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추진방향

○ 수요 및 판매 가능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적정 생산, 가공, 유통 기반 구축

○ 품목별 주산지를 중심으로 거점센터와 생산단지로 구분 육성하되 거점센터에는 수확 후 관리시설을 생산단지는 공동작업 장비 중심지원

거점센터	경영 및 판매능력이 있는 운영주체와 유통 및 가공시설을 갖추었거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지역농협, 농업법인, 들녘공동경영체 등) * 정책지원 : 선별/건조/보관/가공시설, 수매자금 등(들녘경영체육성사업+기금)
생산단지	일정규모 이상의 생산비중이 있고 품목별 조직화가 되어 있거나 발전가능이 있는 지역(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 지역농협 등) * 정책지원 : 교육컨설팅, 생산장비, 자재비, 장려금, 운반비 등(들녘경영체육성사업+자체사업)

⇨ 쌀 과잉구조 해소(타작물 재배), 식량자급률 제고와 연계 다양한 소득원 창출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밭 식량작물 생산, 가공, 유통에 참여하는 농가 및 법인

○ 소요예산 : 3,150백만원(도비 473, 시군비 1,102, 자부담 1,575)

○ 지원내용 : 생산자재비, 운반비(생산단지 → 거점센터), 생산장려금 등

세부사업	사업량/사업비	지원대상	사업단가
생산자재비(논)	500ha/1,250백만원	논 타작물 재배농가	ha당 250만원, 운반비 포함
생산자재비(밭/신규)	1,000ha/1,500백만원	밭 식량작물 재배농가	ha당 150만원, 운반비 포함
생산장려금(밀)	800톤/100백만원	밀 재배농가	40kg당 일반(5천원), 무농약(7), 유기(10)
생산장려금(논콩/신규)	600톤/300백만원	논 콩 재배농가	kg당 500원

* 거점센터에는 수매자금(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3.3%) 및 시설장비(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 세부 추진계획

○ 품목별 생산, 가공, 유통사업 관계자 의견수렴 및 보완

○ 2021년 시범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자 선정

□ 기대효과

○ 밭 식량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체계적 육성으로 식량자급률 제고

2	on-line(비대면) 충남쌀 택배 포장라인 구축	한국판 뉴딜대응	3대위기 극복시책	기 타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현황 및 여건

○ 코로나 19 이후 off-line 소비가 위축되고 on-line(비대면) 소비 폭발적 증가

○ 도내 RPC(33개소) on-line 택배 물량의 폭발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택배 포장라인 설치가 전무한 상황

- 서천통합('19년 기준 30%이상↑), 당진통합('19년 기준 20%이상↑)
- 예산통합 : '19년 기준 5억원 → '20. 6월말 21억원, 400%이상↑

⇨ 소비자 need에 맞는 택배 시스템 구축으로 충남쌀 경쟁력 강화

〈「예산통합 RPC」 코로나19 대응 사례〉

► 택배 물량 폭주에 따른 인력부족 → 농협 충남본부에 인력 요청

* 충남본부에서 4월~6월 기간중 6회(월2회), 총40명(1회당 5~8명)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충남쌀 택배 포장라인 구축 10개소(반자동9, 자동1)

○ 총사업비 : 650백만원(도비 98, 시군비 227, 자부담 325)

○ 지원대상 : 정부지원 RPC(33개소)

○ 사업내용 : 택배 포장라인(제함기) 설치 등 지원

○ 지원단가 : 반자동(50백만원/개소당), 자동(200백만원/개소당)

□ 세부 추진계획

○ RPC별 택배 시스템(판매물량, 소요인력 등) 실태조사

○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세부 사업량 및 사업비 등 예산 확보

□ 기대효과

○ 농산분야 비대면 판매 활성화로 코로나19 극복 선제적 대응

○ RPC 경영안정 및 고품질 충남쌀 이미지 제고 등 경쟁력 강화

3	염류 집적 시설하우스 담수 지원사업	한국판 뉴딜대응	3대위기 극복시책	기 타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현황 및 여건

○ 충남 시설재배 면적 7,532ha로 전국 51,226ha의 14.7% 차지(전국3위)

○ 연작피해가 많은 오이, 멜론, 수박, 토마토, 고추 등 면적·생산량 전국 순위권

※ 오이(면적1위, 생산량 1위), 멜론(1위, 2위), 수박(2위, 2위), 토마토(4위, 4위), 고추(4위, 4위)

○ 농업·농촌 가치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성 증대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시설채소(수박, 멜론, 토마토 등) 재배 농업인

- 연작장해 방지를 위하여 담수로 휴경하는 시설하우스

○ 사 업 량 : 4,000동(264ha)

○ 사 업 비 : 2,000백만원(도비 600 시군 1,400)

- 지원단가 : 시설하우스 1동(660m^2)당 50만원

○ 지원내용 : 연작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하우스 담수 이행금 지원

□ 세부 추진계획

○ 시군별 담수 지원사업 참여희망 농업인 수요 파악

- 참여 희망 농업인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예비대상자 선정

○ 2년 동안 담수 이행 확약에 따른 꾸준한 사업 추진 및 관리

○ 사업추진 하우스 토양염류(EC) 검정, 생산량 비교 등 사업성과 분석

□ 기대효과

○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창출 및 경쟁력 제고

○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

4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꾸러미 공급시스템 구축	한국판 뉴딜대응	3대위기 극복시책	기 타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현황 및 여건

○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의 고령화, 재배면적 감소, 소비부진에 따른 소비활성화 및 공급업체 경영비 경감을 위한 택배비 지원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21년부터 전국 시행('19년: 시범사업)

○ 코로나19 등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자들의 소비 및 구매패턴 변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통신판매업 신고 후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소비자에 꾸러미 공급을 하는 친환경 생산자 단체(농업회사법인, 영농법인)

○ 사 업 량 : 14,000명 * 2019년 출생자 : 13,257명

○ 사 업 비 : 1,334백만원(도비 320, 시·군비 747, 자담 267)

* 사업비 : 14,000명 * 12월 * 2회 * 4,000원 = 1,334백만원

** 꾸러미 택배비 지원단가 : 4,000원(도비 1,200, 시군비 2,800, 자담 800)

○ 지원대상 품목 : 친환경농산물, 유기인증 가공품

○ 사업내용 : 도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사업장 택배비 지원

□ 세부 추진계획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장에 대한 택배비 지원으로 꾸러미 사업 활성화로 소비촉진

○ 도내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꾸러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 지원

○ 택배비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3만원 이상 신청 시 택배비 지원

○ 공급업체 선정 : 시·군 자체 여건에 따라 선정 추진

□ 기대효과

○ 친환경농산물 소비활성화로 생산기반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구조 다변화를 통한 다양한 소비자를 확보 소비활성화 유도

5	임대농기계 운반 서비스 체계 구축	한국판 뉴딜대응	3대위기 극복시책	기 타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현황 및 여건

○ 현 상 황 : 농기계 구입비 절감 및 농기계 활용도 제고를 위해 운영 중인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 농가의 최대 애로사항 해소

* **정책 만족도는 매우 높으나, 임대센터의 운영인력부족과 농기계 운반이("트럭이 없어") 가장 불편하다는 여론(이용농가, 도정평가위원 등)**

○ 임대센터 : 15개시군 32개소(본소15 지소17), * 최다 : 서산/태안 각 4개소

○ 보유대수 : 8,544대(개소당 267), 임대실적 78,173대(개소당 2,443대)

○ 근무인력 : 138명(개소당 4.3명), * 주요업무 : 신청접수, 출고, 반납, 수리, 교육 등

○ 운반방법 : 농가직접 10개시군, 운반서비스 5개 시군(시군직영4, 위탁1)

* 농가부담(왕복) : 천안(위탁, 8.8만원중 2만원) 금산(1.5~3만원), 공주,서산,논산(4만원)

○ 애로사항 : 시군입장(인력부족, 불만민원多), 이용자측면(운반, 청소, 부속기 부착 등)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시군 5개소/5,000대(개소당 1,000대)

○ 대상센터 : 본소, 지소, 밭주산지, 원거리, 도심지별 각 1개소

○ 대상농가 : 중소농가(2ha↓), 고령농가(65세↑), 여성농가 등 취약농가 우선 지원

○ 소요예산 : 500백만원(도비 90, 시군 210, 자부담 200)

- 지원단가 : 왕복10만원(자부담 4만원) * 4회운행 필요

○ 지원내용 : 임대센터 ↔ 농작업지(농가 희망장소)까지 왕복 운반

○ 운영방법 : 상·하차 장비 및 농기계 조작 가능한 지역화물업체 등과 위탁계약 체결운영(인력 및 운반장비 구입비용 절감)

※ 임대사업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출고, 반납 기계확인, 입고업무까지 위탁

□ 세부 추진계획

○ 임대사업소, 화물업체 관계자 및 이용농가 등 의견수렴 및 보완

○ 2021년 시범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자 선정

□ 기대효과

○ 차량이 없는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운반을 통해 이용 활성화 도모

Ⅱ 보완·발전시켜 나갈 기존 시책

1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사업 확대 운영

확 대	축 소	보 완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필요성

○ 지속적인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로 농촌지역 내 노동력 확보 절실
* (농업인구) '15)308,455명 → '19)263,124 (고령화) '15) 41.5% → ('19) 51.3%

○ 기계화율(60.2%)이 낮은 밭작물에 대하여 소규모 고령농 농기계작업 지원 필요

□ 추진계획

○ 사 업 량 : 100개소('20년 54개소)

○ 사 업 비 : 14,000백만원(도비 2,940, 시군비 6,860, 기타 4,200)

○ 사업대상 : 영세소농 **65세이상, 1ha이하**농가, 과수 및 시설채소 등 전업농가

○ 사업내용 : 센터 운영비, 농기계작업비, 상해보험료, 교통비, 간식비 등 지원

○ 기대효과 : 코로나 대응 적기 농기계작업 및 인력중개를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

2 농업용 드론 공급

확 대	축 소	보 완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드론 수요

○ 2019년 기준, 道內 농작물 병해충 방제면적은 약 71만ha로 추정되며 2025년에는 전체 면적의 26%인 19만ha가 드론을 이용한 작업예상

○ 2025년까지 필요한 드론은 1,890대가 예상되며, 2020말 예상보유량 403대를 제외하면 향후 5년간 1,487대, 이중 80%를 道정책사업으로 공급시 1,190대 해당
- 나머지 297대는 현안사업, 농협, 시군, 농가자율 구입 등으로 공급

□ 추진계획

○ 사 업 량 : 200대(소형기준)

○ 지원대상 : 농업법인, 쌀전업농, 밭작물 재배농가, 과수농가 등

○ 소요예산 : 4,400백만원(도비 700, 시군비 1,500, 자부담 2,200)

○ 추진계획 : 쌀전업농 연합회, 들녘별 공동경영체, 개별농가 의견수렴 및 수요조사

○ 기대효과 : 고령화 대응 농촌인력 부족 해소 및 농업기계화 촉진

3 가족농 중심 노후온실 스마트팜 도입 교체사업

확 대	축 소	보 완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현황 및 여건

○ 고령화·노동력 문제에 대응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규모 농가에 스마트팜 도입은 필수적이나 자본력 부족으로 도입에 어려움

○ 스마트팜, 시설원예에 대한 사전지식 없는 지원으로 성공확률 감소

⇨ 생산능력이 낮은 중소원예농업인(가족농)에 대한 스마트팜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가족농 육성 추진

□ 추진계획

○ 사업대상 : 소규모 원예작물 재배농가 50ha

○ 사 업 비 : 6,500백만원(도비 975, 시군비 2,275 자담 3,250)

○ 사업내용 : 소규모 원예농가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 추진계획 : 노후하우스 대상 농가 스마트팜 전환자 농가 우선지원

○ 기대효과 : 노후온실 교체를 통한 스마트팜 확산 및 생산성 향상으로 소득 창출

4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사업

확 대	축 소	보 완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현황 및 여건

○ 변동직불제 폐지 가격하락시 소득보전대책 미흡 및 식량산업 경쟁력 약화

○ 쌀 전업농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용절감 농법 도입 및 확산추세

- 파종(직파), 육묘, 이앙 등 초기 경영비 절감 변화 시도

* 밀묘소식 : 육묘상자(200개↓/ha), 이앙주수(28주↓/3.3㎡) → 생산비 절감(429,500원↓/ha)

□ 추진계획

○ 사 업 량 : 볏짚환원 등 7개 세부사업

○ 소요예산 : 7,470백만원(도비 1,254, 시군비 2,926, 자부담 3,290)

○ 지원대상 : 삼광벼 계약재배농가, 쌀전업농, 소규모 도정공장 등

○ 추진계획 : 시군, 쌀전업농, 양곡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기대효과 : 새로운 농법 도입을 통한 농촌 일손부족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

Ⅲ 일몰 사업

1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지원

ㅇ 사 업 량 : 5시군 11개소 20ha('17년 미승인 LMO유채 발견지)
ㅇ 사 업 비 : 63,000천원(도비 18,900, 시군비 44,100)
ㅇ 사업대상 : 농기계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생산자, 영농법인 등
ㅇ 사업내용 : 유전자변형생물체(유채) 및 근연종 식물체 제거
ㅇ 지원내용 :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근연종 식물체 제거를 위해 인력제거 및 농기계(로터리작업)비용

⇨ 일몰사유 : LMO유채 발견지 사후관리 기간 만료

2 인삼류 제조가공 시설현대화

ㅇ 사 업 량 : 12,500장
ㅇ 사 업 비 : 500백만원(도비 90, 시·군비 210, 자부담 200)
ㅇ 지원대상 : 인삼류 제조업체
ㅇ 사업내용 : 플라스틱 채반 교체 및 가소제 검출 위험 장비 교체
ㅇ 추진성과 : 인삼제품류의 불순물 검출 방지 및 안전성 강화

⇨ 일몰사유 : '18~20년까지 추진결과 인삼류 제조업체 교체 완료

3 GAP 인증인삼 선별비 지원

ㅇ 사 업 량 : 70톤
ㅇ 사 업 비 : 70백만원(도비 17, 시·군비 39, 자부담 14)
ㅇ 지원대상 : GAP 인증 공동선별에 참여하는 농가
ㅇ 사업내용 : GAP 인증 공동선별비 지원
ㅇ 추진성과 : GAP 인삼 공동선별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

⇨ 일몰사유 : '16년부터 추진 수요조사 결과 수요량 감소로 일몰

붙임 **주요사업비 조서**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 계		400.1	0	74.1	173	153
밭식량작물 거점센터 육성	17개소	31.5		4.7	11	15.8
비대면 충남쌀 택배포장라인 구축	5개소	6.5		1.0	2.3	3.2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사업	264ha	20		6	14	
친환경농산물식재료꾸러미지원	14천명	13.4		3.2	7.5	2.7
임대농기계 운반 시스템 구축	5개소	5		0.9	2.1	2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100개소	140		29	69	42
농업용드론공급	200대	44		7	15	22
가족농중심 노후온실 스마트팜 도입 교체사업	77ha	65		9.8	22.8	32.4
식량작물생산비절감사업	7개사업	74.7		12.5	29.3	32.9
		0				
		0				
		0				
		0				

농촌활력과

Ⅰ 신규 추진시책

1 지속 가능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

한국판 뉴딜대응	3대 위기 극복 시책	기타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코로나 19로 방문객 및 매출액 감소에 따른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 도시민 체험확대, 재방문 유도를 위한 도농교류 활성화 대책 필요

□ 현황 및 필요성

○ (현 황) 방문객·매출액 감소의 충격은 농촌성장 저해, 농촌관광산업 위기 봉착, 농촌사회 혼란을 초래하여 지속가능한 농촌지역사회 발전의 걸림돌

※ 전년 동기 대비(6월말 기준) 매출액은 48.4%가 감소, 방문객은 35.1%가 감소

○ (필요성) 향후 1년은 침체된 도농교류 재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
- 신규·보완 지원사업 도입을 통해 방문객수 감소 추세를 완화하고, 농촌관광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 투자 확충 필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136개소)
○ (예 산 액) 858백만원(도비 100%)
○ (지원분야) 2개분야(기반조성, 거버넌스)
○ (사업내용)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공모사업 등

사 업 명	사업비(백만원)	내 용	비 고
농촌체험휴양마을 공공요금 지원	136	숙박시설 등 전기요금	기반조성
농촌체험휴양마을 자동소독기 구입지원	50	자체소독 자동소독기	기반조성
농촌체험휴양마을 방역 용역비 지원	122	전문 방역업체 방역 용역비	기반조성
노후 농촌체험·휴양시설 리모델링 지원	500	노후 시설 리모델링	기반조성
농촌체험휴양마을 주도적 활동사업	50	자발적 참여 공모사업	거버넌스

□ 세부 추진계획

○ ('20. 9.) '21년 본예산 반영을 위한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도→시군)
- 사업수요·시군 의견 및 모니터링을 통한 '21년 사업계획 수립
○ ('20. 12.) '21년 자체역량 강화 및 자발적 참여 공모사업 발굴

□ 기대효과

○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자체 역량강화 및 내실화로 도시민 재방문 확대
○ 농촌체험휴양마을 도농교류 기반조성을 통한 지속적인 도농교류 도모

2	농촌현장포럼 지원(살기 좋은 희망마을 조성)	한국판 뉴딜대응	3대위기 극복시책	기타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2012년부터 행정리 단위 마을(4,364개 농산어촌) 대상 수준별 맞춤형 발전 육성을 위한 역량수준 유형에 따라 전략적 마을만들기 추진

※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사업 지방이양, 도 차원 지속추진 필요성

□ 현황 및 여건

○ 행정리 단위 4,364개마을 중 '19년 까지 973개 마을 발전계획 수립
- 농촌현장포럼을 통한 마을발전계획 수립
- '19년까지 농식품부 지원, 지방이양으로 '20년부터 시군자체 추진중

○ 마을발전계획 수립 현황(농촌현장포럼 추진)

도 내 행정리	연차별 수립 현황(마을)									비고
	계	'12	'13	'14	'15	'16	'17	'18	'19	
4,364	973	258	250	150	63	63	63	63	63	'20년 65마을

○ 마을역량 단계별 사업추진 현황(2012년 ~ 2019년)

구 분	계	1단계	1.5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비고
단계별 사업추진	1,753	973	410	178	106	86	

※ 마을역량 수준에 따른 단계별 지원방식

1단계 일반마을	⇒	1.5단계 선행사업	⇒	2단계 새싹마을	⇒	3단계 꽃마을	⇒	4단계 열매마을
발전계획 수립 (농촌현장포럼)		역량강화 (희망마을 선행사업)		소규모 마을사업 (자율개발)		중대규모 마을사업 (종합개발)		마을활성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행정리 단위 3,326개 마을

○ 사 업 량 : 14개시군 42개소(**시군당 3개소/년, 계룡시 제외**)

○ 사 업 비 : 420백만원(도비 126, 시군비 294) / 개소당 10백만원

○ 사업내용 : 마을 자원조사, 컨설팅,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 세부 추진계획

○ '21년 시행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도비 30%, 시군비 70%)

○ 년도별 추진계획

(단위 : 마을수)

구분	계	'21	'22	'23	'24	'25	비고
농촌현장포럼	210	42	42	42	42	42	

□ 기대효과

○ 지역공동체활성화로 지역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 실현

○ 농촌사회 유지 및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공간 조성

3	농촌테마공원 활성화 지원	한국판 뉴딜대응	3대위기 극복시책	기타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준공 된 농촌테마공원의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건설팅 지원
→ 농촌테마공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연계 체험·관광·휴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활성화 모색

□ 현황 및 필요성

○ **(현 황)** 도내 농촌테마공원은 6지구(준공 5, 공사중 1)로 대부분 주변 경관을 활용, 내방객으로 하여금 볼거리 및 쉴거리등의 편의만 제공하는 실정

○ **(필요성)** 농촌테마공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휴양 프로그램을 운영은 서천 동부지구테마공원이 운영하고 있으나 활성화가 부족하며, 타지구도 테마공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컨설팅 필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농촌테마공원 5지구 중 **연도별 1지구**
※ 총 5지구(금산 천내, 서천 동부, 예산 광시한우, 홍성 홍양, 당진 합덕제)

○ (예 산 액) 지구당 200백만원(도비 100, 시·군비100)

○ (지원내용) 농촌테마공원의 활성화와 인근 농업·농촌자원을 연계한 체험·관광·휴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컨설팅

○ (지원기준) 계획수립, 프로그램 개발 등 S/W분야에만 사용 가능하며, 시설설치·시설물 유지·보수 등 H/W 조성과 건설기계 등 장비 구입용도 사용 불가

□ 세부 추진계획

○ ’20. 8. : ’21년 예산 반영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道 → 시·군)
- 수요조사 이후 2021년 예산 확보

○ ’21. 1.~12. : 대상 시·군 선정 및 지원사업 추진

□ 기대효과

○ 농촌테마공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및 도농교류 활동을 통해 지역 농업 생산 및 가공, 서비스 등 1·2·3차 산업의 융복합 및 다각화 실현

○ 농촌 주민의 직·간접적인 참여와 활동을 유도하여 지역내 소득 및 고용의 기회를 증대하는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소규모 가정간편식(HMR) 생산경영체 지원	한국판 뉴딜대응	3대 위기 극복 시책	기 타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코로나19희 확산 등으로 바뀐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경에 따른 도내 소규모 가정간편식 생산기업을 지원·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현황 및 여건

○ 1인가구와 맞벌이 부부, 고령가구 증가로 가정간편식*이 새로운 식품산업 트렌드로 대두

- 농식품부 '2018년 우리나라 가구 가공식품 지출구조' : 2018년 한가구당 외식비 전년대비 1.4% 감소, 가공식품 구입비 2.6% 증가, 1인가구 가공식품 지출액 6.6% 증가 추세
- 도내 소규모 가정간편식(HMR) 등 생산경영체 현황(19. 9. 기준) : 46개소

※ 가정간편식(HMR : Home Meal Replacement) : 간단하게 데워 즉석에서 섭취할 수 있는 식사(비대면 소비에 걸맞은 식사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바뀌어가는 소비패턴으로 각광받고 있는 중)

○ 현대인의 생활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집밥문화, 조리과정의 간소화 등의 이유로 성장하고 있는 가정간편식시장을 반영하여 농식품 제조분야에 대한 신규사업 모델 개발이 필요

- 도내 농산물을 주원료로 소비하는 소규모 생산기업 지원하고자 함

※ 제4차 경제산업 대책본부회의 시 행정부지사 강조(소규모 가정간편식 식품산업 육성 적극 추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농산물을 활용하는 소규모 가정간편식 생산 경영체

○ 소요예산 : 20억원(도비 4.2, 시군비 9.8, 자부담 6)

- 개소당 사업비 : 4억원(도비 0.84, 시군비 1.96, 자부담 1.2)

○ 사 업 량 : 5개소(공모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내용 : 제조·가공시설 현대화(제조·가공시설 지원), 상품디자인 개선 등

□ 세부 추진계획

○ (2020. 10.) 2021년 본예산 사업비 반영을 위한 수요조사(道 → 시·군)

- 수요조사 이후 2021년 본예산 사업비 반영 기초자료로 활용

○ (2020. 1. ~ 12.)2021년 지원사업 공모 추진 및 보조사업 추진

- 공모조건 : 도내 농산물을 활용하는 가정간편식 생산 경영체

□ 기대효과

○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 및 충남형 가정간편식 생산기반 조성

⇒ 변화하는 식품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사업모델개발로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

5	농촌복합산업(6차) 인증사업자 자체점검 시스템(앱) 개발	한국판 뉴딜대응	3대 위기 극복 시책	기 타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기본정보(현황) 파악 등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한 맞춤형 시스템(앱) 보급으로 농촌융복합(6차)산업 통계 및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현황 및 여건

ㅇ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경우 인증조건 시 제출한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연간 조사하게 되어있음
- 주요조사내용 : 생산제품 주원료 비율, 전년도 매출액·일자치 창출 등

ㅇ 또한, 인증사업자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경영체 전반적인 상황(기본정보) 파악을 위해서는 유선이나 일부자료로 추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
- 생산자원 등 기본정보 등에 대한 자료를 경영체가 직접 입력가능한 플랫폼 구축 ⇒ 도·시군에서 경영체 방문없이 현황실태 확인이 가능한 쌍방향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1. 1. ~ 2022. 12(2년간)

ㅇ 사업수행 : 충남연구원(충남농업6차산업센터)

ㅇ 소요예산 : 2억원(도비 100%)

ㅇ 사업내용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관리시스템 구축
- 탑재내용 : 매출액, 일자리창출, 위생상태 확인, 생산제품 주원료 사용비율 점검 등

□ 세부 추진계획

ㅇ (2020. 8. ~ 12.)2021년 본예산 신규사업비 반영 추진

ㅇ (2021. 1. ~ 4.)시스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회 개최
- 시·군,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인증자협회, 프로그램 개발업체 등

ㅇ (2021. 5. ~ 12.)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관리시스템 개발

ㅇ (2022. 1. ~ 12.)인증사업자 관리시스템 보급 등 사후관리
- 시스템 보급 및 이용방법 등 관련교육 추진(시군별 담당공무원 현장교육 병행 등)

□ 기대효과

ㅇ 인증사업자 모니터링(사후관리) 시 해당분야 전문가가 인증사업자에 대한 관련정보 신속파악 가능(경영상태 파악 ⇒ 개선사항 진단)

ㅇ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정보·기록관리(매출액, 일자리 창출실적) 등 생활화로 각종 통계자료 활용 시 공유시스템 실현화

6	충남도 전통주제품 디자인개선 지원	한 국 판 뉴딜대응	3대위기 극복시책	기 타
		예산사업	비 예 산 사 업	

◇ 충남지역 전통주의 개성을 담고 소비자 구매 목적에 부합하는 경영체 맞춤 포장재 디자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 현황 및 여건

○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식품을 선택할 때 맛과 향에 의하여 구매하기도 하지만, 식품의 외관·포장상태 등을 보고 그 가치를 판단하여 구매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2017년부터 전통주에 대한 온라인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전통주의 온라인 브랜드 개발에 대한 부분이 높아짐에 따른 제품특성을 살리기 위한 도내 전통주제품 디자인개발 등이 필연적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2022. 12(2년간)

○ 사업수행 : 대행사업자 공모선정

○ 소요예산 : 연 40백만원(도비 100%)

※ 경영체별 보조사업비 자부담 20% 별도 추진예정

○ 사업내용 : 충남도 전통주제품 디자인개선 지원 10개 경영체

- 경영체 제품별 특성(고급화, 보급형)을 살린 디자인개선 지원
- 전통주 용기·규격 다양화, 포장재 디자인 등

□ 세부 추진계획

○ (2020. 8. ~ 12.)2021년 본예산 신규사업비 반영 추진

○ (2021. 1. ~ 3.)2021년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대행사업자 선정

○ (2021. 4. ~ 12.)2021년 대행사업자 전통주 디자인개선 지원 추진

□ 기대효과

○ 전통주 용기, 규격의 다양화, 포장재 디자인 개선으로 소비자의 만족도 향상을 통한 충남지역 전통주 고급화 및 소비촉진

⇒ 규격, 디자인, 홍보마케팅 등 종합적지원으로 충남전통주 대중화

Ⅱ 보완·발전시켜 나갈 기존 시책

1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개선

확 대	축 소	보 완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필 요 성)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이 사무장의 경력, 마을운영 규모 등에 관계없이 지원

* 사무장의 사기저하 및 우수인력 사무장 진입에 한계

○ (지원목적) 농촌체험휴양마을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활성화 도모

○ (지원내용) 1인 월 180만원*(보조금) + @(4대보험, 자담 등 마을부담)

○ (검토사항) 사무장 경력반영, 마을운영 규모에 따른 형평성 지원

- 사무장(경력기간 반영), 마을운영규모(방문객수, 매출액 등)

○ (추후사항) 사무장 활동비 개선을 위한 시군, 협의회 의견수렴 등

2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확 대	축 소	보 완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필 요 성)

- 균특예산 지방이양('19.4월) 국가정책에 따른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정책추진 필요
- 시·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마을만들기사업" 축소에 따른 농촌활성화정책 및 중간지원조직 퇴색 우려

○ (지원대상) 14개시군 / 사업기간 3년

○ (지원내용) 지구당 5~10억원(자율개발 5억 이하, 종합개발 10억 이하)

○ (소요예산) 12,000백만원(도비 3,600, 시군비 8,400)

※ 재원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연 도	계	도 비	시군비	비 고
2020년	4,000	1,200	2,800	'20년 신규(36지구) : 20%
2021년	**12,000**	**3,600**	**8,400**	**'20년 계속(36지구) : 40% '21년 신규(35지구) : 20%**
2022년 이후	20,000	6,000	14,000	'20년 계속(36지구) : 40% '21년 계속(35지구) : 40% '21년 신규(35지구) : 20%

* **사업비 지원방식 : 1년차 20%, 2년차 40%, 3년차 40%**

3 농촌 유휴시설 활용 농촌 활력 제고

확 대	축 소	보 완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필 요 성)

- 농촌지역의 각종 공유시설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귀농·귀촌인 창업 공간 및 사회서비스 공급 등으로 활용, 농촌지역 활력 제고

*** 농촌지역에 필요한 돌봄·교육·문화서비스 제공 공간 조성 등**

○ (지원대상) 15개 시군

○ (지원규모) 개소당 450백만원/년 (국비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유휴시설 리모델링 사업 지원

○ (운영주체) 농촌지역에서 창업 희망 또는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단체 및 지자체

○ 추진상황 및 국·내외 사례

- ’20년 보령시 원산도출장소 창고 리모델링

  ⇒ 관광안내소 운영(450백만원)

- ’17년 전남 순천 농협 양곡창고 지자체에서 매입하여 리모델링

  ⇒ 창업 희망 청년 선발 창업교육(6개월) 후 창업공간 제공(2년간)

  * ’17.2월 개장 후 점포 5개소 창업, 방문객 40만명, 매출액 20억원

- ’19년 경북 상주시 (구)농업기술센터 상담소 리모델링(운영위원회 구성)

  ⇒ 주민 요리교실, 공유밥상 및 주1회 빵집 운영(공유 부엌으로 활용)

- (일본) 철도 폐선구역 스즈시 구역사를 리모델링

  ⇒ 스즈시 NPO법인 관광협회 활동 거점 공간 및 지역특산물 판매장 운영

  * 시설관리 및 관광업무 법인에 위탁, 법인 자체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 거양

4 2021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공모지원 요건 보완

확 대	축 소	보 완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ㅇ (필 요 성)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공모신청조건 중 교육이수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의무교육에서 권장교육(가점항목)으로 변경추진

ㅇ (추진방안) 2021년 공모선정부터 교육이수에 부분을 의무교육에서 권장교육으로 변경

ㅇ (개선내용) 보조사업 희망자는 사업신청 전 의무교육을 교육이수 시 해당 공모 서류·발표심사 가점항목으로 변경

→ 공모신청자 선택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보조사업자 역량강화 추진

ㅇ (소요예산)7,540백만원 / (사업기간)2021. 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재원비율 : 도비 59%(지방이양 50%, 도비 9%) + 시군비 21% + 자부담 20%

5 2021년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

확 대	축 소	보 완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ㅇ (필 요 성)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비)식품 산업화로 농가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ㅇ (지원대상) 일반 농식품 분야에서 기능성 식품 및 비식품 분야로 확대 개발지원

- (기능성) 가정간편식, 미세먼지 배출식, 고령층 영양식 등
- (비식품) 농자원 활용 세제, 건축자재, 화장품, 농축산 보조자제 등

ㅇ (지원내용) 총사업비 30억원 이하로 SW(50%):HW(50%)의 비율을 사업의 성격과 목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H/W50~70% 등)

ㅇ (지원방법) 공모에 의한 사업자 선정

ㅇ (소요예산) ('21년) 1년차 사업으로 15억 내외, 사업의 규모에 따라 2~4년차 사업으로 지원

* 재원비율 : 도비 59%(지방이양 50%, 도비 9%) + 시군비 21% + 자부담 20%

Ⅲ 일몰 사업

1 소규모 제조가공업체 HACCP 인증지원

○ (일몰사유) ’20년 말 식품위생법 전면 시행(HACCP 인증 의무화)에 따라 지원 필요성 낮음

○ (사업목적) ’20년 말 식품위생법 전면 시행(HACCP 인증 의무화)에 대비하여 경영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증 컨설팅 등 지원

○ (사 업 량) 30개소/ 600백만원(도비 126, 시군비 294, 자담 180)

○ (지원대상) 도내 소규모 농식품기업

○ (사업내용) 컨설팅비, 검교정비, 성분 분석비, 위생소모품 구입비 등 지원

붙임 **주요사업비 조서**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6개 사업(신규)		**37.2**		**11.46**	**19.74**	**6**
지속가능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	1식	8.6		2.6	6	
농촌현장포럼지원(살기좋은희망마을조성)	42개소	4.2		1.26	2.94	
농촌테마공원 활성화 지원	1지구	2		1	1	
소규모 가정간편식(HMR) 생산경영체 지원	5개소	20		4.2	9.8	6
농촌복합산업(6차)인증사업자 자체점검 시스템(앱) 개발	1식	2		2		
충남도 전통주제품 디자인 개선 지원	1식	0.4		0.4		
5개 사업(보완)		**222.4**	**2.25**	**95.28**	**107.97**	**16.9**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개선	70명	1		0.5	0.5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14개 시군	120		36	84	
농촌유휴시설 활용 농촌 활력 제고	15개 시군	4.5	2.25	0.68	1.57	
'21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공모지원 요건 보완	26개소	75.4		44.5	15.8	15.1
'21년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	3개소	21.5		13.6	6.1	1.8

산림자원과

Ⅰ 신규 추진시책

1	미세먼지 차단 숲, 생활밀착형 숲, 자녀안심 그린숲 등 도심녹지 조성	한국판 뉴딜대응	3대 위기 극복 시책	기타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필요성

○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변화에 체계적인 대응 필요

※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전국 26㎍/㎥으로 WHO 권고기준 (10) 및 주요 도시 (도쿄13.8, 런던11) 대비 2배 높음

○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부작용 없는 자연친화적 대응 방안으로 도시숲 중요성 증가

○ 다양한 사회적 위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대한 책임 확대 요구

□ 개 요

○ **미세먼지 저감·차단 숲 조성**('20 ~ '25년 / 1,048억원 / 104.8ha)

-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미세먼지를 차단·흡수할 수 있는 숲 조성

○ **생활밀착형 숲 조성**('20 ~ '25년 / 50억원 / 실내정원 5개소)

- 공공시설 및 국·공유지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 실내 공기질 개선, 도시환경 개선 도모

○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21 ~ '26년 / 20억원 / 10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차도를 좁히고 자투리 공간에 수고가 낮고 넓은 폭의 숲을 조성하여 등하교길 생활환경 개선

□ 기대효과

○ 미세먼지 저감, 녹색 생활공간 확충 및 도시민 휴식 정서함양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유휴토지 활용도 제고

□ 향후 추진계획

○ 중앙(산림청) 부처로부터 국비(50%) 정부 예산 확보

Ⅱ 보완·발전시켜 나갈 기존 시책

1 드론 활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확 대	축 소	보 완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체계적 · 과학적인 예찰 및 방제로 재선충병 청정지역 확대

○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확대를 위한 과학적 방제방법 필요

○ 드론을 활용한 정밀 예찰·방제로 건전한 산림생태계 유지

※ 헬기 항공방제보다 저공비행 방제로 주변피해 최소화

<개 요>

- 위 치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11 시·군)
- 기 간 : 2021. 1. ~ 12.
- 사 업 량 : 111,301ha(소나무 반출금지구역)
- 사 업 비 : 91억원(국비 77%, 도비 7%, 시·군비 16%)

<추진방안>

- 시·군별 방제계획 수립 및 2021년 방제 예산신청·확보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확정에 따른 기본조사 및 피해목 조사(월 1회) 실시

※ 중앙(산림청) 부처로부터 국비(77%) 정부 예산 확보

2 산림을 이용한 힐링 및 건강숲길 정비 · 보완

확 대	축 소	보 완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에 따른 여가 트렌드 변화에 대응

○ 코로나19사태 이후 단체관광 축소, 소규모 개별 관광 각광

○ “숲길 통합 관리” 등 충남의 특색 있는 숲길 조성·관리

<개 요>

- 기 간 : 2021. 1. ~ 12.
- 사 업 량 : 15개소 / 시·군 당 1개소 / 개소별 노선 10km이내
- 사 업 비 : 30억원(지방이양도비 등 60%, 시·군비 40%)/ 개소별 200백만원

<추진방안>

- 정상정복형 산행에서 벗어나 트레킹길, 휴양치유 숲길 중심으로 정비·보완
- 신규 개설,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옛길·마을길·숲길 보완 정비 등

붙임 **주요사업비 조서**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미세먼지 차단 숲, 생활 밀착형 숲, 자녀안심 그린숲 등 도심녹지 조성	3종	1,118	559	112	447	
드론활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11,301ha	91	70	6	15	-
산림을 이용한 힐링 및 건강숲길 정비·보완	15개소	30		18	12	

축산과

Ⅰ 신규 추진시책

1	한우 미경산우 비육 지원사업	한국판 뉴딜대응	3대위기 극복시책	기 타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한우 미경산우 사육기반 구축으로 한우 적정두수를 유지 관리함으로써 한우산업 기반안정에 기여하고 향후 한우가격 폭락에 선제적 대응

□ 현황 및 여건 (추진배경)

○ 한우 가격 호재에 따른 한우 사육두수 증가로 수급 안정화 사업 필요

- 한우 사육마릿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도축마릿수는 '20~'22년에 '19년 대비 각각 2.5%, 9.8%, 18.3% 증가 전망

○ 송아지 가격의 상승으로 암소 도축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암소 도축률 하락에 따른 가임암소 수의 증가는 송아지 생산두수 증가에 영향

- 송아지 생산(만마리) : ('17) 88.0 → ('18) 91.3 → ('19) 94.8 → ('20.p) 97.5 → ('21.p) 100 → ('22.p) 104

○ 관세 철폐 등 수입육 소비량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우 사육두수 및 가임암소 증가 등 공급량 상승과 더불어 한우 가격 하락

- 향후 국가별 쇠고기 관세 철폐 시기 : '25년(미국), '28년(호주), '29년(캐나다)

□ 사업개요

○ 목　　적 : 안정적인 한우산업 유지를 위해 적정 사육두수 조절

○ 사업대상 : 한우 사육농가 중 미경산우 비육 희망농가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800백만원(도비 240, 시비 560)

○ 사 업 량 : 2,000두(두당 지원단가 : 400천원)

○ 사업내용 : 미경산우 사육농가에 장려금(사육보조비) 지원

□ 기대효과

○ 한우 미경산우 비육으로 국내 한우 사육두수 조절 및 산지 한우가격 폭락에 사전 대비

○ 사육두수 조절을 통해 중장기적 산지 한우가격 안정화

○ 미경산 비육우의 생산으로 한우농가 부가가치 증대 및 수입 쇠고기 대응

2	축산농협사료 충남공동사업 사료공장 신축	한국판 뉴딜대응	3대위기 극복시책	기 타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축산농가와 축협의 상생을 위한 전국 최대규모 신규 사업으로 도민 의식주중 먹거리와 고품질 사료산업 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업임

⇨ 사료 품질관리 중요성(HACCP) 및 일반 사료업체 견제 농가 사료비 절감

□ 현황 및 여건 (추진배경)

○ 도시계획으로 **사료공장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통합신축 운영**

- 現 당진축협 배합사료공장은 2종 일반주거지역과 맞닿아 있어 지속적인 아파트단지 주거지역 민원발생 다발
- 또한, 現 홍성축협 배합사료공장은 주변 옥암택지지구 개발과 홍성군청 이전 확정('23년 준공계획)으로 이전 불가피

○ 민원 해소를 위해 **도심내 위치한** 노후 사료공장('75~'80년 설립)의 통합 신규 이전으로 고품질 사료공급 기반 구축 및 **현대화 시설 절실히 필요**

* 당진축협 8만톤/년, 보령축협 3만톤/년, 홍성축협 5만톤/년

⇨ **충남 축산농가에 고품질 사료를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당진시 송산면 가학리 산 118-3 일원 (63,266㎡/19,138평)

○ 사업대상 : 3개축협(**당진·보령·홍성축협**)

○ 사업기간 : 2021 ~ 2022년(2개년)

○ 사 업 비 : 340억원[국비융자 40(12%), 지방비 10(3%), 자담 290(85%)]

○ 사업내용 : 최첨단 자동화시설 배합사료공장 신축(생산능력 : 24만톤/년)

□ 세부 추진계획

○ 부지확보 완료 : 당진시 송산면 가학리 일원(63,266㎡/19,138평)

- 사업예정지 환경성 검토 등 인·허가 절차 이행 중

○ 당진축협에서 사료공장 신축후 참여조합 지분율에 의거 현물 출자

⇨ 농식품부 협의 국비융자 확보 및 지방비 확보 추진 계획

□ 기대효과

○ 사료 수급안정과 고품질 사료생산으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

○ 충청남도 사료산업 발전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참 고	사업예정지 : 당진시 송산면 가학리 산 118-3 (면적 : 63,266㎡)

☐ 참여조합 축산농협 現 사료공장 현황

업체명칭	대표자	소 재 지	공장설립 (등록일)	생산능력 (톤/일)	비고
3개소				470	
당진축협	김창수	당진 무수동7길 42	'80. 6. 5	220	
보령축협	윤세중	웅천 산업단지길67	'75. 8. 5	100	
홍성축협	이대영	홍성 구항길 389	'77.12.24	150	

Ⅱ 보완·발전시켜 나갈 기존 시책

1 축산악취 저감 공모사업 확대 추진

확 대	축 소	보 완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축산악취 저감 공모사업 확대 추진

○ **(필요성)** 도에서 편성한 일률적인 사업으로는 축산악취 해결 한계

○ **(추진방안)** 시군·지역별 특성(분뇨발생량, 처리시설 등)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추진으로 효과적인 축산악취 문제 해결방안 모색

- 악취저감시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기계장비 등 종합 패키지 지원

○ **(세부 추진계획)**

사업구상(2월)	⇨	사업신청(3월)	⇨	평가(4월) (서류, 현장, 발표)	⇨	사업확정 (5월)
시군		시군 → 도		도		도→시군

↳ 평가단 구성(道) : 전문가 3인 이상(교수, 관련기관 등)으로 구성

→ 기존 '내포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사업' 등 일몰·축소로 재원조달

※ '20년) 4개소, 20억원(도비 3, 시군비 7, 자담 10) → '21년) 6개소, 30억원(도비 4.5, 시군비 10.5, 자담 15)

2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

확 대	축 소	보 완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

○ **(필요성)** '20년 이상저온에 따른 냉해피해로 벌꿀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아까시 꿀'** 생산량 급감으로 **양봉농가 경영악화 초래**

- 양봉농협 입고량 : '19년(2,511톤)⇢'20년 173톤 전년대비 93% 감소

※도내 사육규모(행정통계 기준) : '19년) 2,590호, 278,848군

○ **(추진방안)** 꿀벌 사육기반 유지를 위한 양봉농가 사료 구입비 지원

○ **(세부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양봉 30군 이상 사육농가(15개 시·군)
- 사 업 량 : 양봉사료 1,000톤/1,000백만원(도비150, 시·군비350, 자담 500)

※ **지원단가** : kg**당** 1,000**원**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사업내용 : 양봉사료 경영안정을 위한 사료(설탕) 구입비 지원

붙임 **주요사업비 조서**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융자)	도비	시군비	기타
한우미경산우 비육 지원사업	2,000두	8		2.4	5.6	
축산농협사료 충남공동사업사료공장 신축	1개소	340	(40)	10		290
축산악취 저감 공모사업 확대	6개소	30		4.5	10.5	15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	1,000톤	10		1.5	3.5	5

동물방역위생과

Ⅰ 신규 추진시책

1	사회적 배려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한국판 뉴딜대응	3대위기 극복시책	기타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필요성(현황)

○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활용한 사회적 배려층 지원

* 외로움 감소, 삶의 만족도 향상, 자살예방 및 책임감 증가 등

○ 2020년 충남 반려동물 양육현황 자체조사 결과(1차)

배려계층 가구			수급가구 반려동물 양육		
독거노인	장애인	보훈가족	가구수	개(마리)	고양이(마리)
14,847	133,724	25,500	2,021	2,145	539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반려동물을 기르는 수급 취약계층(독거노인, 장애인, 보훈가족)

○ 사업내용 : 반려동물 치료비 및 예방접종비 등 양육비용 일부 보조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가구)	단가 (천원)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25%	시군비50%	자담25%
사회적 배려계층 반려동물 진료 지원	1,500	200	300	-	75	150	75

□ 세부 추진계획

○ 관련부서(복지·보훈)와 유기적 협업 등 사업효과 극대화

○ (사)충남수의사회와 진료비 할인 등 업무협조를 통한 사업수행

○ 동물보호법에 의한 동물등록 개체에 한하여 지원 ⇢ 미등록 개체 등록 유도

□ 기대효과

○ 사회적 배려를 통한 도민의 삶의질 향상 및 행복감 증진

○ 반려동물에 대한 적정 진료지원 등 동물복지 증진효과 도모

2	언택트 가축방역점검 시스템 구축사업	한 국 판 뉴딜대응	3대위기 극복시책	기 타
		예산사업	비 예 산 사 업	

□ 필요성

○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시 농가점검 필요

* 살처분 보상금 6,145억원 지출 : 구제역 5차례 4,753, AI 7차례 1,392

○ 농가방문 점검시 접촉에 의한 위험성 해소 및 점검인력·시간 절약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축장, 상시거점소독시설 및 축산농가

○ 사업내용 : 비대면 원격으로 방역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차량소독시설 작동여부, 소독실시 상황 등 실시간 영상 확인 등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개소)	단가 (천원)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50%	시군비50%	자담
언택트 가축방역 점검 시스템 구축	30	30,000	600	-	300	300	-

□ 세부 추진계획

○ ’21년부터 도축장(농장), 거점소독시설 시범설치 후 축산농가* 설치 확대

* ICT 사업, CCTV 설치 및 취약농가 우선 추진 후 사업대상 확대

○ 시범설치 후 운영효과 분석 및 미흡사항을 보완, 향상된 시스템 적용

- 사료급여량 및 축사내 가스 측정 등 사양관리 등과 연계

□ 기대효과

○ 도축장, 축산농가 등에 대한 상시·원격 점검으로 질병발생 요인 사전 차단 및 책임의식 제고

○ 시스템에 의한 상시 방역·사양관리로 질병예방 및 생산성 향상

Ⅲ 일몰 사업

1 축산물판매업소 위생개선장비지원

○ 사업대상자의 잦은 휴·폐업 등으로 인한 사후관리 및 보조금 회수 문제점 발생

○ '17~'19년 사업평가 분석 결과 예산집행률 부진(62%→72%→73%)

○ '20년 보조사업('19 회계연도) 운용평가 결과 미흡으로 '21년도 일몰 결정

※ 20년도 사업비 : 125백만원(도비 $25^{20\%}$, 시군비 $62.5^{50\%}$, 자담 $37.5^{30\%}$)

붙임 **주요사업비 조서**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사회적 배려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1,500	3		0.75	1.5	0.75
언택트 가축방역점검 시스템 구축	30	6		3	3	

Ⅱ. 충남연구원 시책구상보고

발제자료 총괄

구분	제안정책(사업)명	소요예산 (백만 원)	관련부서	제안자 (충남연구원)
1	**충남형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720	농림축산국, 기획조정실, 건설교통국, 해양수산국, 자치행정국	박경철 박사
2	**실과별 핵심정책사업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350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식량원예과, 농촌활력과, 산림자원과, 축산과, 동물방역위생과	강마야 박사
3	**농민주도형 환경위기 문제해결 리빙랩 프로젝트**	210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식량원예과, 농촌활력과, 산림자원과, 축산과, 동물방역위생과	강마야 박사
4	**농촌마을 읍면 단위(보건-복지-문화-교육 등)통합돌봄 시범사업**	551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관련 타실과 부서	김기흥 박사
5	**충청남도 농업유산 자원 발굴과 제도 도입**	50	농업정책과	유학열 박사
6	**미세먼지 저감 '해안림-농촌숲-도시숲' 체계 마련**	1,200	산림자원과	사공정희 박사
7	**농식품 안전성 지원센터 조성**	1,500	농식품유통과 농촌활력과	김현숙 센터장
8	**농촌협약 시대,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시범사업**	1,000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구자인 센터장
	합계	5,581	농림축산국 7개 부서 + α	

주 : 발제순서는 충남연구원 조직 직제 순으로 나열함.

1 충남형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 복지정책이자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을 농어촌 지역에 먼저 도입해 도농 간 불균형 발전과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
◈ 마을 특성에 따른 충남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기본소득 정책 선도하고 농어촌 주민에게 새로운 활력과 기회 부여

□ 필요성 및 목적

○ 그동안 산업화와 도시화 우선 정책을 통해 농업과 농촌은 국가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고 그와 같은 정책은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음
○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되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가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도시에 더 자본과 인력이 집중되는 역설을 낳게 됨
○ 개발과 경쟁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국토 어디에 살아도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시스템 구축

□ 주요 내용

○ 농어민수당에서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범위 확대
- 충남도는 올해 농어민수당을 전국 지자체 최고액인 농가당 80만원 지급으로 확정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주목
- 농어민수당을 도입한 것은 농정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농어민인구는 농어촌 인구의 1/4에 불과하기 때문에 농어민수당만으로 농어촌 활성화에는 한계 존재

○ 충남 특성의 마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후 점차 확대
-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민수당보다 훨씬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도입하기에는 한계 존재
- 따라서 우선 충남도 특성에 맞는 마을(중산간, 평야, 어촌) 몇 군데를 선정해 시범적으로 2년 정도 실험
- 실험결과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어촌 주민에게 상당한 정도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충남도내에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이를 채택해줄 것을 건의

○ 충남농업환경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조

- 충남도는 농촌마을 환경개선과 직불제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농업환경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험 축적
- 이 사업은 이후 중앙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현재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기에 농어촌기본소득도 이와 같은 모델을 참고할 필요

※ 참고 : 경기도 사례

○ 경기도는 올해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위한 연구 진행

- 경기도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위해 현재 지급 방식, 지급 액수, 대상 선정 그리고 성과지표 개발 등에 관한 연구 진행 중
- 연구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경기도내 과소·고령 면(面) 1곳을 대상으로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매월 30만원 정도)을 지급하는 실험 예정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과소·고령화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낙수효과 혹은 후광효과를 가정한 지역개발방식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소외되고 배제된 농촌주민 모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직수효과 정책

○ 소요예산 : 약 720백만 원(시범사업 3개 마을×100명×20만원×12개월)

□ 기대효과

○ 새로운 차원의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써의 농어촌기본소득 의제 선도

○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공약제시 시 근거자료로 활용

○ 직접지원 방식의 정책 전환을 통해 인구소멸, 지역 간 격차로 희망을 잃어버린 농어촌 주민에게 새로운 활력과 기회 제공

관련 부처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기획조정실, 건설교통국, 해양수산국, 자치행정국
작성	제안자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박경철

2 실과별 핵심정책사업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 충남 농정분야 실과별 핵심정책사업(혹은 공약이행사항)에 대해서 사업설계 단계부터 사업평가 단계에 이르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실시
◈ 민관협치 방식으로 성과관리 협업, 농정에 대한 신뢰회복 기여

□ 필요성 및 목적

○ 그동안 수많은 농정분야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책목표에 맞는 단위사업 선택, 일부 사업별 성과관리 미흡하여 농정 신뢰도 저하
○ 당초 사업성과 발휘를 위해서 사업목표에 맞는 성과지표, 이에 맞는 설계, 집행과 관리, 평가 등 민관협치 방식의 환류체계 구축 필요
○ 충남의 농정분야 실과별 최소 1개 핵심정책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실시 제안

□ 추진계획 및 주요내용

○ 핵심정책사업별 성과관리시스템 단계별 모식도

구분	주요 내용	주체
기획단계 (5개월)	사업목적, 사업내용, 성과지표 등 협업방식으로 기획, 구상	충남연구원 연구과제 추진(도의회의원 연구모임, 도 및 시군 농정부서, 시군별 다양한 형태의 자치조직, 민간기구)
의견수렴단계 (1개월)	시책구상 제안 토론회 및 워크숍	충남도의회, 도 및 시군 농정부서, 충남연구원, 시군별 다양한 형태의 자치조직, 민간기구 등
예산단계 (2개월)	본예산 심의,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충남도의회 및 시군별 의회, 도 및 시군 농정부서
집행단계 (3개월)	사업집행, 관리 및 감독, 결산 등	도 및 시군 농정부서
평가단계 (1개월)	사업평가, 현장의견수렴, 현장실태조사 등	충남연구원 연구과제 추진(민관 공동참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도출)

주 : 굵은 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민관협치, 협업방식으로 수행하는 단계를 말함.

○ 핵심정책사업별 성과관리시스템 단계별 모식도(예시)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정책사업목표	제값주고 제값받는 농산물 유통선진화 체계 구축	
⬇		
단위사업명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		
성과지표(개선 전)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 확대	전년도 목표 대비 증감율
▼▼		
	(목표에 맞는 지표 설정, 지표 달성 위해서 역으로 정책프로세스 진행)	
성과지표(개선 후)	*로컬푸드 참여농업인(법인 포함) 수취가격 안정 혹은 소득안정도 기여*	*목표에 맞는 지표개발*
(1단계)	*로컬푸드 참여농업인(법인 포함) 출하실적 데이터(품목별/시기별 물량, 가격자료 등) 취합*	*기준가격 데이터 구축*
(2단계)	*로컬푸드 참여농업인(법인 포함) 수취가격 시계열 데이터 구축 및 모니터링*	*지속적인 모니터링(모니터링 주체는 민간)*
(3단계)	*농업인(법인)의 농산물 수취가격안정성 정도 측정(CV)*	*알림지수 발동 매뉴얼 작성*
(4단계)	*농산물 수취가격 변동성(CV)계수값 기준 설정* *- 0.5이하이면 (농산물가격) 안정성* *- 0.5이상이면 (농산물가격) 불안정성*	*전문가 자문*
(5단계)	*로컬푸드 참여농업인(법인 포함) 및 소비자 반응 조사, 의견수렴 등 피드백*	*현장조사 실행*
(6단계)	*차후연도 성과지표 반영, 제도개선 반영 등*	*정책피드백*

○ 소요예산 : 약 350백만 원(핵심정책사업 1식×7개 부서×5천만 원)

□ 기대효과

○ 핵심정책사업별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서 소기 사업성과 달성에 기여

○ 정책프로세스와 틀에 입각한 체계적인 사업실시 가능, 전국에서 선도적인 “농정 틀 전환 모델”로서 자리매김, 기초토대 마련 기여

○ 민선7기 중반부를 점검하여 남은 후반부 동안 실과별 핵심정책사업(혹은 공약사항) 성과극대화, 농정의 신뢰회복 기여

관련 부처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식량원예과, 농촌활력과, 산림자원과, 축산과, 동물방역위생과
작성	제안자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강마야

※ 참고자료 : 실과별 핵심정책사업과 농정분야 공약사항

○ 실과별 핵심정책사업(2020년 기준)

구분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농업정책과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지원정책과 농업기반 시설 강화를 통해 농업경쟁력 강화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 지원대상자 만족도(%) 농업기반시설 국비예산 확보 전년대비 3%이상 증액(억원)
농식품유통과	제값주고 제값받는 농산물 유통선진화 체계 구축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백만 불)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 확대(%)
식량원예과	농가 경영안정과 지속가능한 고품질 농업 육성	농작업지원단 운영(개소) 스마트팜 확대 식량자급율 제고대책 추진
농촌활력과	농촌경제활성화 및 생활환경 기반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	희망마을만들기 선행사업 추진(개)
산림자원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가치를 제고하여, 임업 경쟁력 강화	산림자원육성(%)
축산과	고품질 축산물에 대한 수요에 맞춰 자연친화형 중심 선진축산업 육성	충남 한우광역브랜드 1등급 출현율(%) 축산악취 최소화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달성도(%)
동물방역위생과	선진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AI 발생건수(건수) 위해축산물 발생 감소율(%)

자료 : 충청남도(2020),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엑셀자료).

○ 민선7기 농정분야 공약사항

구분	공약사항	담당부서
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식량원예과
	직불금 강화 등 농민 소득 향상 정책 추진	식량원예과
	가축 사육기반 조성을 통한 축산물 가격안정 추진	축산과
	가축분뇨 악취저감 대책 추진	축산과
	친환경급식 차액지원 사업으로 농민소득 증대	농식품유통과
	푸드플랜 수립 및 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	농식품유통과
	고교 무상급식	농식품유통과
시군	충남 고품질 쌀 생산비 지원	식량원예과
	농어촌 순환경제 활성화로 소득 증대	농업정책과, 수산산업과
	충남 농산물 공공급식 시장 창출	농식품유통과
	충남 농산물 브랜드 육성 지원	농식품유통과
	기업형 축사 규제를 통한 마을환경권 확보	축산과
	예당호 주변 귀농, 귀촌 예술인촌 형성	농촌활력과
	오서산 산림레포츠단지 및 힐링숲 조성	산림자원과
	인수공통전염병전담대응팀 설치	동물방역위생과

자료 : 충청남도(2017), 민선7기 2018-2022 공약실천계획.

3 농민주도형 환경위기 문제해결 리빙랩 프로젝트

◈ 코로나 19로 인한 기후위기 심각성 재인식 필요, 농업·농촌 분야도 전지구적인 환경문제 고민, 대안 동참 필요, 기존 사업 인식변화 필요
◈ 주제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중심, 방식은 농민주도 리빙랩

□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로 인하여 기후위기 심각성을 재인식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뉴딜(2020)[1]은 농업·농촌 분야 내용 부족
- 농업·농촌 분야와 관련한 사업은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및 농촌 주민참여형 태양광설치 지원 등에 불과, 현재 많은 비판 받는 중

○ 농업·농촌 분야에서도 생산성 중심 농정에서 탈피하여 전지구적 환경문제를 고민,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환 준비할 필요

○ 행정과 전문가가 주도하는 문제해결과 정책도출은 한계에 도달, 농민이 직접 주도하는 리빙랩[2] 방식의 소규모 프로젝트 제안
- 농민이 다같이 모여 실험적으로 마을 내, 지역 내 농업·농촌 환경문제 해결하려는 과정(리빙랩living lab : 살아있는 사회실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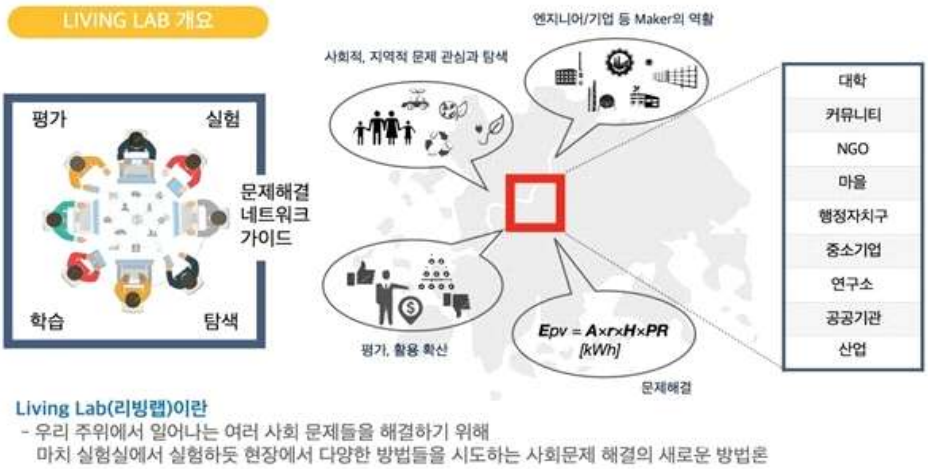
□ 추진계획 및 주요내용

○ 대응전략 및 접근관점에서 주체 모두 인식변화가 중요한 전제조건
-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농촌 환경 보전 중요성, 농업·농촌도 예외가 아니라 생산성 중심 보조사업을 탈피, 공동으로 대응해야 함을 재인식
- 주제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중심, 방식은 농민주도 리빙랩

○ 진행절차 : 『현실 문제인식-해결방안 탐색-정책제안과 실천사항』
- 1단계 : 행동주체그룹 구성(농민주도, NGO, 기술자, 전문가, 행정)[3]
- 2단계 : 마을 내, 지역 내 농업·농촌 분야에서 환경관련 이슈의 발견

1)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0),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
2) 주 : 리빙랩(living lab)이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실험실에서 실험하듯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는 사회문제 해결의 새로운 방법론을 말함(출처 : 서울시 NPO지원센터).
3) 주 : 행동주체로서 마을회, 지역별 중간지원조직, 영농법인, 협동조합, 기타 생산자조직(단체), 품목별 연구회, 미래농정포럼, 농업회의소 등 기존 다양한 논의기구를 활용하도록 함.

- 3단계 : 매월 정기모임, 관점의 통일, 이슈의 공감, 현장 방문 등
- 4단계 : 해결방안 탐색과정(민간과 행정 모두)
- 5단계 : (행정측) 정책제안사항 도출, (민간측) 현장실천사항 도출



자료 : 서울시(NPO지원센터(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3542)

○ 마을별, 지역별 상황과 특성 고려한 핵심문제 해결프로젝트(예시)

- 최근 사례로서 예산군 미세먼지 리빙랩 프로젝트 운영 중(민간주도로 예산마을연구소 설립, 운영 중), 주요 내용은 예산군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영농폐기물 소각, 가축분뇨로 인한 암모니아” 중 영농폐기물 소각 저감 방안 모색(시군 정책협력과제로 진행)

<예시>
- 바이오디젤을 사용하하는 농업기계(경운기, 트랙터, 트럭) 리빙랩 프로젝트
- 축산과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대안찾기 리빙랩 프로젝트
- 시설원예단지 중심지역 토양 땅심복원 리빙랩 프로젝트
-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및 유통경로 실태조사 리빙랩 프로젝트

○ 소요예산 : 약 210백만 원(환경이슈사업 1식 × 7개 부서 × 3천만 원)

□ 기대효과

○ 농업과 농촌 분야가 직면한 환경문제를 농민 주도하에 먼저 해결해보려는 시도 자체가 긍정적 변화 유발 가능

○ 농민이 주도적으로 문제해결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프로젝트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비한 민간 자치역량 기회 마련

관련 부처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식량원예과, 농촌활력과, 산림자원과, 축산과, 동물방역위생과
작성	제안자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강마야

※ 참고자료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 분야별 세부과제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

(단위: 국비(조원), 일자리(만개))

	분 야	과 제	'20추~'22	'20추~'25	일자리
총 계			49.0	114.1	190.1
디지털 뉴딜	합 계		18.6	44.8	90.3
	1. D.N.A 생태계 강화	소 계	12.5	31.9	56.7
		1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3.1	6.4	29.5
		2 1·2·3차 全산업으로 5G·AI 융합 확산	6.5	14.8	17.2
		3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2.5	9.7	9.1
		4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0.4	1.0	0.9
	2.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소 계	0.6	0.8	0.9
		5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0.3	0.3	0.4
		6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0.3	0.5	0.5
	3. 비대면 산업 육성	소 계	1.1	2.1	13.4
		7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0.2	0.4	0.5
		8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0.6	0.7	0.9
		9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0.3	1.0	12.0
	4. SOC 디지털화	소 계	4.4	10.0	19.3
		10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3.7	8.5	12.4
		11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0.6	1.2	1.4
		12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0.1	0.3	5.5
그린 뉴딜	합 계		19.6	42.7	65.9
	5.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소 계	6.1	12.1	38.7
		13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2.6	6.2	24.3
		14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1.2	2.5	10.5
		15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2.3	3.4	3.9
	6.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소 계	10.3	24.3	20.9
		16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1.1	2.0	2.0
		17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3.6	9.2	3.8
		18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5.6	13.1	15.1
	7.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소 계	3.2	6.3	6.3
		19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2.0	3.6	4.7
		20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1.2	2.7	1.6
안전망 강화					
합 계			10.8	26.6	33.9
1. 고용사회 안전망		소 계	9.3	22.6	15.9
		21 全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0.8	3.2	-
		22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4.3	10.4	-
		23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3.0	7.2	3.9
		24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0.9	1.2	11.8
		25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0.3	0.6	0.2
2. 사람투자		소 계	1.5	4.0	18.0
		26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0.5	1.1	2.5*
		27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로 개편	0.6	2.3	12.6*
		28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0.4	0.6	2.9

* 인재양성·직업훈련 사업의 취업자수 추정치(훈련인원×취업률)로 디지털·그린 일자리와 일부 중복 가능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0),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

4 농촌마을 읍면 단위(보건-복지-문화-교육 등)통합돌봄 시범사업

◈ 농촌마을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한 농촌마을 통합돌봄 시스템 필요
◈ 보건-복지-문화-교육 등 통합 추진을 통한 읍면단위 복지 체계 마련

□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돌봄 관련 정책 필요성 증대

○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역사회와 밀접히 결합한 지역 수요 맞춤형 정책 발굴 필요성 대두

- 정부 5개 부처(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연계를 위한 업무협약 실시(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합동보도자료, 2020년 3월 25일)

○ 충남의 복지 문제와 관련한 농촌마을 읍면 단위에서 실천 가능한 통합돌봄 시스템 필요

- 충남의 자살률 1위 오명을 벗기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혜적인 돌봄 정책에서 나아가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촌마을 통합돌봄 정책 요구 증대
- 지역사회의 주민은 물론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논의 구조 필요

□ 추진계획 및 주요내용

○ 농촌지역 읍면 단위의 지역 돌봄 자원 조사 및 거버넌스 구축

- 농촌지역 돌봄 관련 자원 조사를 위한 마을 읍면 단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 거버넌스 형태의 돌봄 체계 구축
- 농촌지역 돌봄 관련 자원 조사 비용 지원, 활동가 지원 등 세부 사업 진행

○ 농촌거주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 개발 및 연계

- 농촌거주 다양한 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역에서 가능한 보건, 복지,

문화, 교육 등 각 통합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추진 사례 분석

- (독거노인, 치매노인 등 대상) 먹거리 지원 서비스(지역농산물 꾸러미, 반찬 지원 사업 등)와 연계한 찾아가는 방문 시스템(각 대상별 상태 체크) 및 의료, 보건 서비스(문제 발생시 의료, 보건 영역 서비스 요청 등)로 연계
- (아동 및 청소년 등 대상) 독서지도, 방과후 심리상담(교육, 문화) 체계화
- (여성농업인 자녀 대상) 농번기 여성 농업인 자녀 대상 돌봄 등 서비스 개발
- 읍면 단위 통합돌봄 사업 진행을 위한 인력풀과 관련해서는 돌봄 도우미 조성으로 농촌 거주 청년, 귀농귀촌인 및 부녀회 등 활용, 관련 교육 실시, 인건비 지원 시스템 마련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조직 등 중간지원조직 활용

○ 행정구역 경계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광역돌봄체계 구성

- 행정구역 경계지역에 특히 독거노인, 치매노인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거주가 많은 상황으로, 행정단위를 넘어서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경계지역 연계 광역돌봄체계 구성이 필요(예시. 홍성군 장곡, 청양군 비봉 및 화성 지역 연합 돌봄, 경계지역 거점 돌봄 기관(노인회관 등 활용) 설치 및 전담 인력 배치)
-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선 경계지역 간 연계 지원 체계(보건소, 재난 및 안전을 위한 119안전센터, 농업기술센터 등 연계) 마련 필요
- 중앙, 광역, 기초 지자체 간 협력 및 지원 방안 제시 등

○ 소요예산 : 약 551백만원

- 읍면 단위 협의체 운영비 지원(2백만원*12개월*2개소=48백만원)
- 자원조사를 위한 활동가 지원비(2백만원*12개월*2개소=48백만원)
- 통합돌봄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사업(100만원*5건=5백만원)
- 지역농산물 꾸러미(2만원*50가구*2개소*12개월=960만원)
- 반찬 지원 사업(2만원*50가구*2개소*12개월=960만원)
- 돌봄 도우미(10명*20만 원*12개월*5회*2개소=240백만원)

- 행정구역 경계지역 광역돌봄 운영비 지원(2백만원*12개월*2개소=48백만원)
- 행정구역 경계지역 광역돌봄 전담인력 배치(지역파견, 2백만 원*12개월*3명*2개소=144백만 원)

□ 기대효과

○ 지역 읍면 단위에서 가능한 마을공동체 돌봄 실천과 포용복지 구현

○ 보건, 복지, 문화, 교육 등 통합 프로그램 실천을 통해 사업 시너지 효과 증대

○ 읍면 단위 통합돌봄 인력 풀 조성으로 농업농촌 일자리 연계 효과

관련 부처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관련 타실과 부서
작성	제안자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김기흥

5 충청남도 농업유산 자원 발굴과 제도 도입

◈ 농촌·농업분야의 그린 뉴딜로서 농업·농촌자원('농업유산')에 대한 보전, 계승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가중요농업유산(농림부) 15개소, 국가중요어업유산(해수부) 8개소, 세계중요농업유산(FAO) 5개소 등재
◈ 충남은 유일하게 '금산전통인삼' 만이 국가·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 필요성 및 목적

○ 농촌·농업 부문의 그린 뉴딜에 있어 핵심 요소는 '지속가능한 농업', '농업과 농촌의 생태적 가치 보전', 'SDGs 목표' 에 있음
○ 농업·농촌자원(농업유산)의 보전, 계승, 활용이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지만 충남지역은 농업(어업)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전남, 경남, 경북 등 타 지역에 비해 농업(어업)유산 등재실적 저조
○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농업(어업) 유산자원의 발굴과 등재를 위한 적극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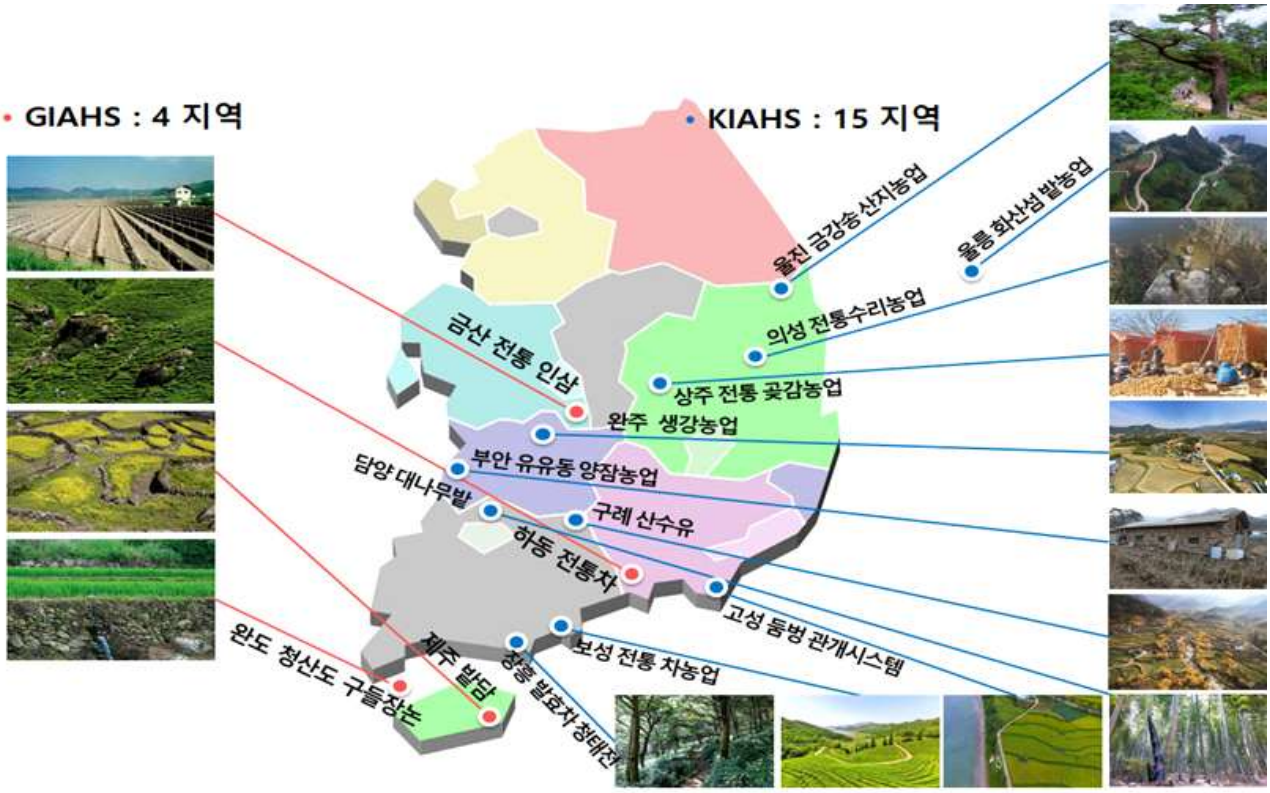
□ 추진계획 및 주요내용

○ 국가 또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충남지역 농업(어업)유산 후보자원의 체계적 발굴 조사(연구용역)
* 충남지역 후보 자원 예시: 한산모시농업, 서산 생강농업, 공주 정안밤, 서천 유부도 백합채취어업 등
* 현재 서천 한산모시농업 국가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연구 추진 중(충남연구원)
○ 가칭 '충청남도 지방농업유산 제도' 도입
* '충청남도 지방농어업유산 발굴, 보전, 활용을 위한 조례(가칭)' 제정 필요
○ 소요예산 : 약 50백만원 (학술용역 1식)
* 용역명: 충청남도 농업유산 후보자원 발굴 조사 연구 용역(예시)

□ 기대효과

○ 오랜 기간 계승되어 온 소중한 농업(어업) 전통지식(지혜)의 보전
○ 농업(어업)유산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농촌지역활성화 전략 모색

※ 참고자료



* 2020년 7월 담양 전통대나무농업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그림 1> 국가 및 세계농업유산 지정 현황

<그림 2> 위계별 농업유산 지정 범위

관련 부처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작성	제안자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유학열

6 미세먼지 저감 '해안림-농촌숲-도시숲' 체계 마련

◈ 축사, 발전소, 서해안, 편서풍(서해 해염입자 및 중국 미세먼지)으로 인한 '충남형 미세먼지 저감대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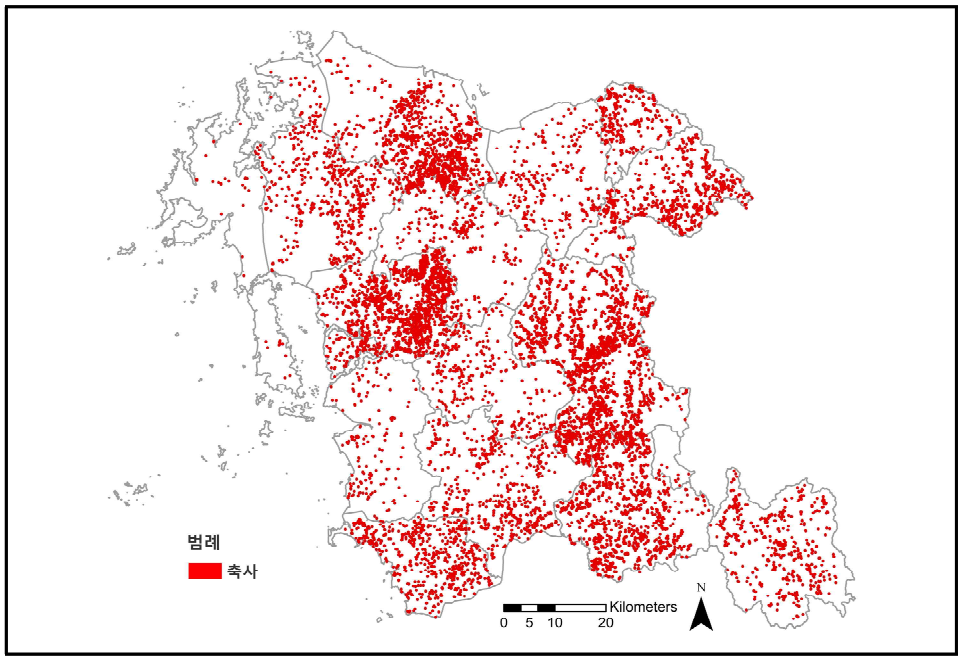
◈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해안림과 도시숲과의 연계를 위해 농촌숲을 도입한 '충남형 숲체계' 마련 필요

□ 필요성 및 목적

○ 충남은 축사와 발전소로 인해 육상에서의 전국 최다 미세먼지 발생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서해로부터 유입되는 해염입자로 인한 1차 · 2차 미세먼지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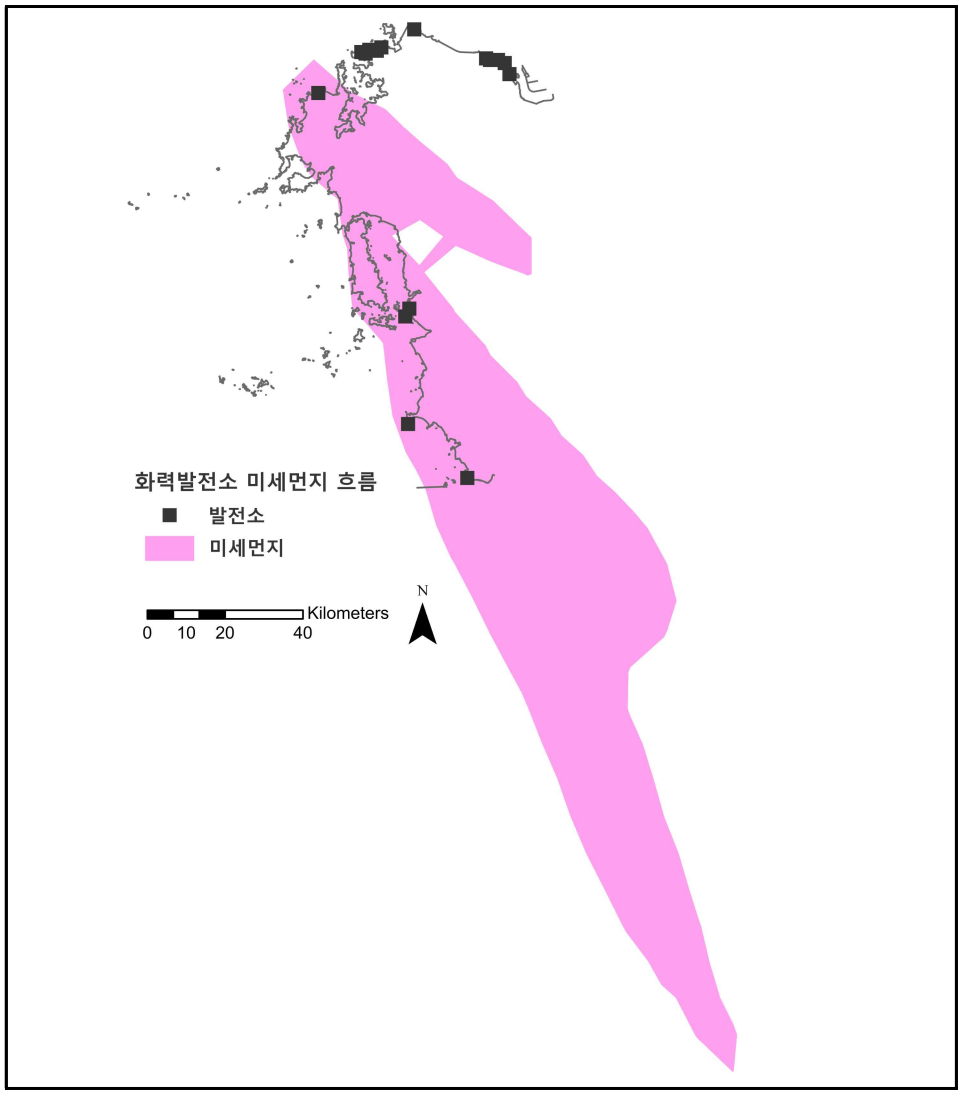
○ 즉, 전국 최대 규모의 축사에서 발생하는 물질들을 비롯하여 전국 1위 배출량의 대기오염물질(환경부, 2019)들이 해풍에 실려 오는 해염입자와 반응할 경우 충남 미세먼지만의 특이성 형성

○ 한편, 충남 해안림은 편서풍을 막는 전통적 기능 및 편서풍을 타고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한발 더 나아가 현재 전국적으로 조성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및 도시숲과 연계하여 해안에서 내륙까지 중복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충남형 숲체계'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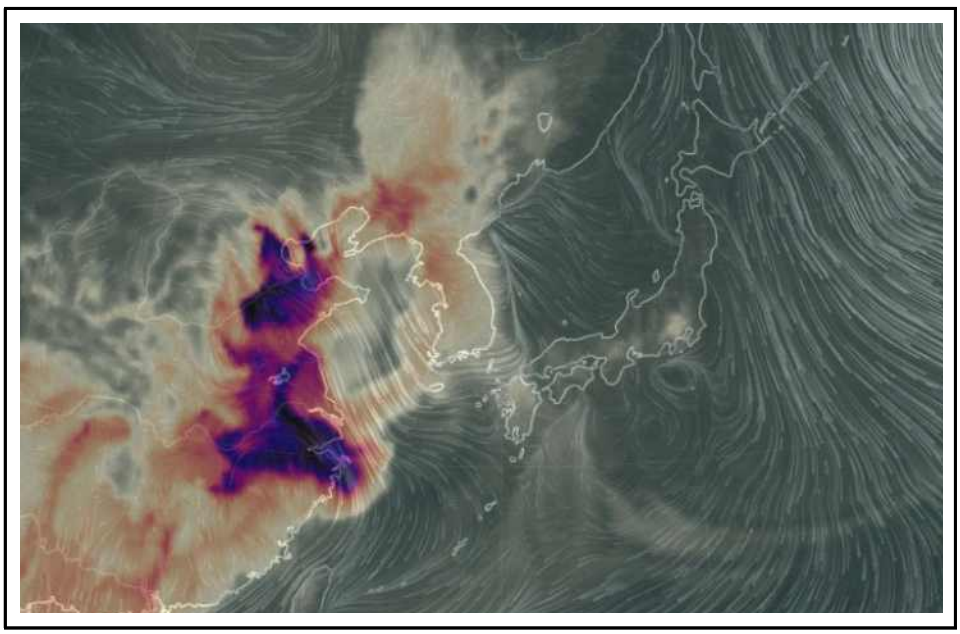
충남 축사 분포도

출처 : 충청남도 내부자료(2017.8)



봄철 충남 화력발전소 배출 미세먼지 흐름(2019.03.07.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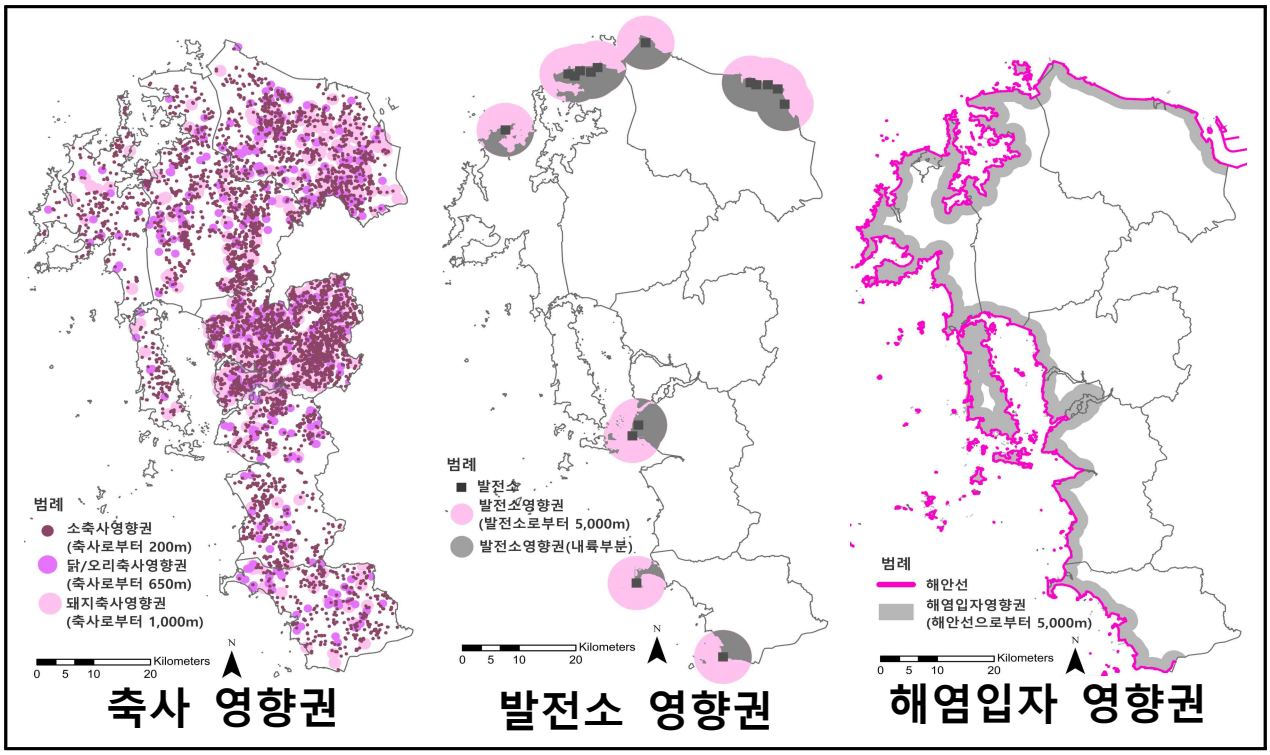
출처 : 충청남도(2019)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Ⅱ), 충남연구원.



중국발 미세먼지 위성영상
출처: https://earth.nullschoo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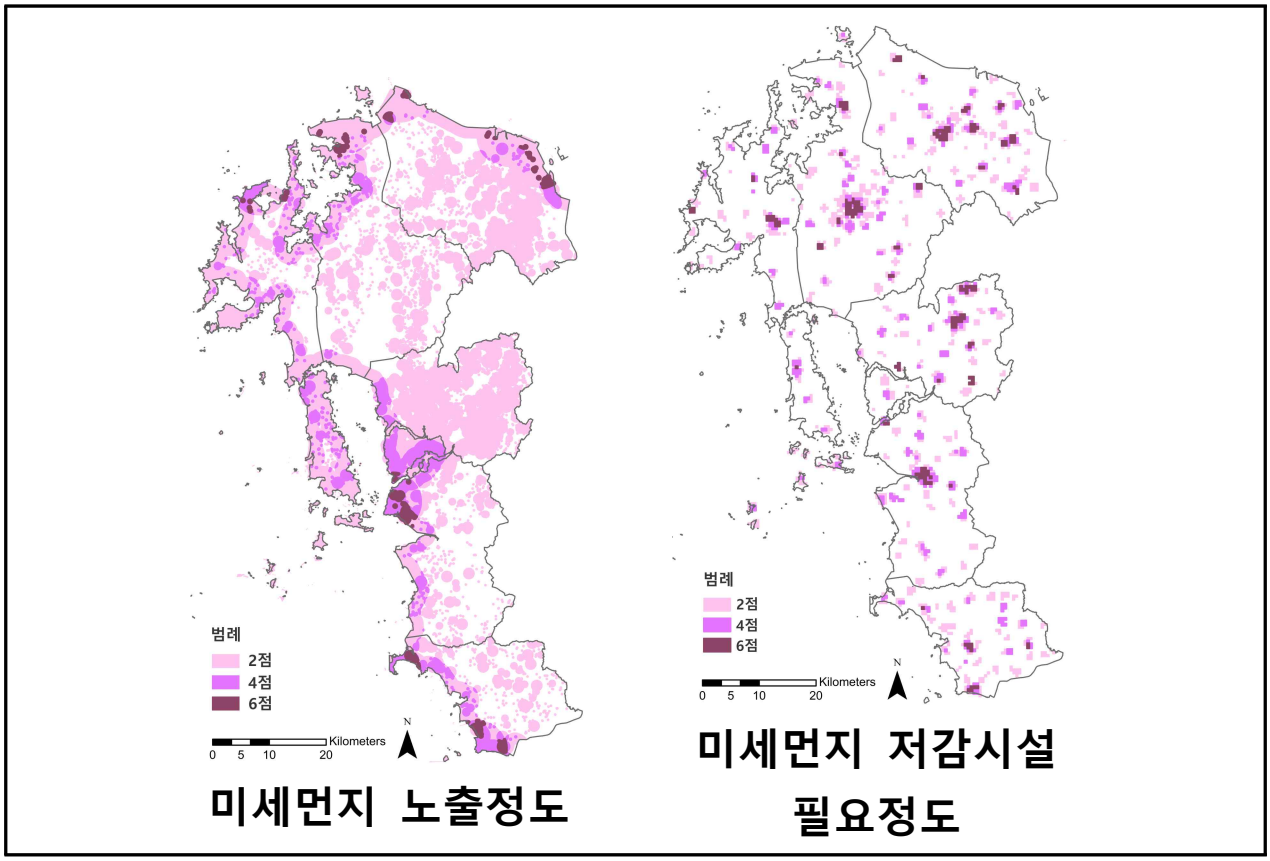
□ 추진계획 및 주요내용

○ 충남형 미세먼지 발생원 영향권 설정



충남형 미세먼지 영향권

○ 미세먼지 취약지역 우선순위 선정(최종 합산평가 필요)



충남형 미세먼지 노출정도

○ 서천을 사례로 해안의 장항송림에서 시작하여 축사 및 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농촌지역에 대한 미세먼지 차단 숲,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지역에 대한 미세먼지 차단숲까지 연계할 수 있는 ‘미세먼지저감 해안림-농촌숲-도시숲’ 체계 제시

○ 소요예산 : 약 1,200백만원(6개 시 · 군 × 200백만원)

□ 기대효과

○ 미세먼지 취약지역 우선순위에 따라 해안림을 관리함으로서 서해안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원천적으로 저감 가능

○ 실제 미세먼지 저감이 필요한 지역에 해안림과 연계한 농촌숲 및 도시숲을 조성함으로써 내륙으로 유입된 미세먼지 이중 차단

관련 부처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작성	제안자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사공정희

7 농식품 안전성 지원센터 조성

◈ 도내 농식품 가공 경영체들의 지속되는 “영양성분 분석 및 자가품질검사”로 인한 불편 및 비용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충남 도내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및 자가품질검사 공인기관”은 단 2곳(금산 중부대, 서산 한서대)으로 경영체의 불편과 비용부담 증가

- 식품안전성 강화를 위한 “농식품안전성 지원센터” 조성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 및 경영체 부담 해소

□ 추진계획 및 주요내용

○ 필요성 검토 : 현재 운영 중인 센터 견학

○ 수요조사 : 충남도내 경영체 대상 검사 현황 및 수요조사

○ 사업성 검토 및 예산 확보

○ 사업지침 및 조례 마련

○ 세부사업내용 : 센터조성비(건축), 시설 및 장비 구축

○ 소요예산 : 약 1,500백만 원

- 센터 조성비(1,000백만 원)
- 센터 운영비(500백만 원/년)

□ 기대효과

○ 소비자의 안전 먹거리 제공

○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

관련 부처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작성	제안자	충남연구원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김현숙

8 농촌협약 시대,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시범사업

◈ 2015년 이후 농촌 마을만들기 중심으로 정비해온 구축해온 '민관협치형 정책 시스템'의 성과를 농촌정책 전반으로 확대
◈ 농식품부 농촌협약의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충남 농정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로 정비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 필요성 및 목적

○ **충남의 농촌마을정책**은 2015년부터 전국 선도적으로 '민관협치형 정책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일정한 성과 도출
- ① 행정 지원체계 정비, ② 민간단체 역량강화와 협력 네트워크 법인 설립, ③ 조례 제정과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등에서 성과를 보임.

○ 충남도 성과를 기초로 **대통령 직속 농특위**에서도 2019년 12월에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을 의결

○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도 전제조건으로 민관협치형 정책 시스템 구축 강조
- 농촌협약 공모사업 지침**(전제조건)** : (1) 반드시 마을만들기 사업 포함, (2) 농촌지역개발 전담부서 신설(지정), (3) 농촌협약위원회 구성, (4) 중간지원조직 운영 등

○ 향후 농식품부는 2020년에 농촌협약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한 9개 시군 이외에 **2021년부터 모든 시군으로 전면 확대**할 예정
- 시범사업 : 충남 홍성군 포함 총 9개 지자체. 국비 총 300억원 + 알파
- 정책과제별 협약대상 사업은 시군별로 자유롭게 구성함(아래는 후보군 예시)

정책 과제(안)	핵심 세부 과제(안)	협약대상 사업 후보군(예시)
농촌 정주여건 개선	365 생활권 조성	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농촌 다원적 활용 지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등
농촌 경제적 활력 제고	자생적 경제 시스템 구축	신활력플러스,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중간지원조직 육성 주민자치협의체 운영	시군역량강화, 사회적농업활성화, 농촌 공동체활성화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등

○ **중앙정부 정책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先계획 後지원' 관점에서 지역주도로 통합적 계획 수립,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정비를 강력하게 '유도'하기 위한 **충남도 시범사업**을 도입
- 충남도 시범사업 : 충남 농촌마을정책의 성과를 플랫폼으로 적극 확장

□ 주요 내용

○ 현재 상황 : 각종 정책 동향에 대한 분산적 대응

- 시군 농정은 사전 준비가 매우 미흡하고, 농촌협약 시범사업에 선정된 홍성군에서조차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182억원)과의 연계 부족, 행정 추진체계 재편 미흡, 민간역량 부족,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검토 부재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중임
- 충남도 광역 행정은 농촌협약에 대응하는 선제적 계획 수립 없이 시군의 신청 동향을 파악하고, 자료를 취합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침

○ 개선방향 : 광역의 '정책적 유도' 기능 강화

- 중장기적으로 농촌협약 시대를 대비하여 충남도 광역 농정 차원에서 '시군 지자체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선도적 역할이 필요함
- 시군 단위로 ① 행정의 통합적 계획 수립 및 관리 역량 강화, ② 민간의 역량있는 활동가 육성, ③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유도 등
- 민관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행정 공무원과 민간 활동가, 중간지원조직 상근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집중적 시행

○ 시범사업 주요 내용 : 도비 2억원 내외 패키지 지원

① 행정의 총괄조정을 담당할 **농정기획단 설치·운영**(인센티브) : 각종 종합계획의 통합적 관리, 행정 업무협조체계 강화, 전문직위제 확대, 민간 전문가 채용 등

② 농발계획 수정·보완을 포함하여 민간이 참여하는 **농촌협약 예비계획서 수립**

③ 농정 분야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인센티브) : 농촌마을+중심지활성화, 6차산업, 귀농귀촌, 사회적농업, 청년농업인, (농촌)사회적경제, (읍면)주민자치 등

④ 농정 분야 민관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심화연수 프로그램 운영**

⑤ 농정 분야 통합형 기본조례 제정, 민간 네트워크 법인 설립 지원 등

○ 시범사업 추진방향 : 시군 지자체 대상 공모 방식

- 2021년도 시범사업으로 공모방식으로 3~4개 지자체 우선 선정하여 추진
- 충남도의 추진체계를 우선 정비하여 시범사업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시범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2022년부터 충남도 시군 전체로 확산

○ 소요예산 : 약 1,000백만 원

- 5억 원/1개년×2개년=10억 원, 도비 3억 원, 시군비 2억 원, 21년 3개소 시범사업

□ 기대효과

○ 충남도 농정의 민관협치형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구축

○ 농촌협약 추진과정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

관련 부서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농발계획, 삶의질계획, 농촌공간계획 등) 농촌정책국 지역개발과(농촌협약 선정,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등)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농발계획, 삶의질계획 총괄 관리)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농촌협약사업 발굴·지원, 시범사업 추진)
작성	제안자	충남연구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구자인

※ 참고자료 : 충남 농촌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현황

○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현황 : 총 14개 시군 완료

- '민간위탁형' 시군(6개) : 천안, 예산, 홍성, 보령, 서천, 금산(7월)
- '재단법인형' 시군(2개) : 청양(2020.7.6), 부여(2020.9월초 예정)

○ 농촌 현장 공공일자리 창출과 '돌아오는 농촌' 기여

- '20년 8월 현재 기준 : 약 80명, 평균연령 36.8세(광역 센터 포함)

[표] 충남 시군 마을만들기(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현황(2020.8 현재)

시·군	센 터 명	개소일	설치유형	사업영역	센터장	상근인력	사무실	민간네트워크
아산시	공동체 지원센터	2015. 7	행정직영	농촌마을+사·경	-	4명	어울림경제센터	*아산시공동체 네트워크*
논산시	(자치 새마을팀)	2015.10	행정직영 (공무직)	농촌마을	-	2명	논산시청	-
예산군	**행복마을 지원센터**	**2015.11**	**민간위탁**	농촌마을+신활력	**반상근**	**7명(中사업단 2명)**	**예산읍 을지빌딩2층**	**(사)예산군행복마을 네트워크**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016. 3**	**민간위탁**	농촌마을+행복생활권	**비상근**	**8명(中사업단 3명)**	**농업인다목적 회관**	**(사)만세보령공동체 네트워크**
천안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2016. 8**	**민간위탁**	농촌마을+신활력	**상근**	**9명(中지원사업3명)**	**도시창조두드림 센터**	**(사)천안시공동체 네트워크 함께이룸**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016.12**	**민간위탁**	농촌마을+도시재생+마을조사단	**비상근**	**11명 (中법인5명)**	**청운대학교 수신관 407호**	**(사)홍성지역협력 네트워크**
서천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017. 1**	**민간위탁**	**농촌마을**	**비상근**	**4명**	**길산내우리터 1층**	**(사)서천마을누리 네트워크**
청양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2017. 4**	**재단법인**	**농촌마을 (+확장중)**	**상근**	**5명**	**청양읍 (구)자원봉사센터**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태안군	농어촌마을 지원센터	2017.11	행정직영	농어촌마을	-	2명(+1명)	태안군청	-
금산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018. 8**	**민간위탁 (진행중)**	농촌마을+신활력	**-**	**8명 (신활력팀3명)**	**금산시네마 2층**	**풀뿌리주민네트워크 (사)금산&사람들**
서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019. 6	행정직영	농촌마을	-	2명	서산시민센터 2층	-
공주시	공동체종합 지원센터	2019. 7	행정직영	농촌마을+사·경	-	4명	공주시청 별관	*(사)마을공동체네트워크*
부여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019.10**	**재단법인 (진행중)**	농촌마을	**-**	**2명**	**부여상권활성화재단**	**부여군지역활성화재단(2020.9 예정)**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020. 6	행정직영	농촌마을	-	3명	도시재생지원센터3층	(추진중)

※ 신활력플러스추진단 설치,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인력 채용, 농촌협약지원센터 지정 등과 연계하여 채용인력은 계속 확대되고 민간위탁 전환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함.

※ 코로나19에 따른 농업.농촌분야 접근관점의 변화와 대응방향 4)

<총괄 요약>

○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 대응현황은 다음과 같음.
- 포스트 코로나19를 고려한다면, 현재까지는 근본적 대책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일시적, 한시적인 긴급지원 중심의 대책수준임. 농업·농촌 분야도 새로운 변화 요구에 맞는 근본적인 대응방향 도출이 필요함.

○ 충남도민패널 심층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근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농산물 유통, 가격을 비롯하여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 과 "충남 지역먹거리 선순환구축을 위한 정책" 이라고 응답함.
- 농정이 핵심적으로 변해야 할 것은 "지속가능한 농정 정책으로 변화, 과감한 행정 혁신 지향, 사회적 약자(소농) 보호 및 생활안정 지향, 민관 거버넌스 확대 순" 으로 응답함.

○ 새로운 접근관점의 변화와 5대 대응방향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일시적, 한시적 긴급대책이 아닌 새로운 정상(New Normal)을 향한 농정 전환과 사람중심 관점으로, 돌봄과 포용 관점으로, 환경과 생태의 관점으로 농정 변화 필요함.
- 먹거리 선순환, 농업인력, 소득 및 경영안정, 환경친화, 통합돌봄 등 대응방향 키워드를 도출함.
- ① 충남 지역먹거리 선순환구축 위한 정책을 위해서 민관협치 및 컨트롤타워 구성과 운영 등
- ② 충남 농업·농촌 사람과 인력 해결 위한 정책을 위해서 농업노동 소중함에 대한 인정과 배려 등
- ③ 충남 농산물 유통·가격·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위해서 생산비 보장하는 수준 가격안정제 등
- ④ 충남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으로 이행하는 정책을 위해서 저비용·저투입 농법 전환 등
- ⑤ 충남 농촌거주 사회적 취약계층 통합돌봄 정책을 위해서 지역수요 맞춤형 돌봄 등

○ 충청남도 농정 추진기반 혁신을 위한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음.
- 농정조직의 혁신, 농정예산의 혁신, 농정정보의 혁신, 농정주체 인식의 혁신이 필요함.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음.

4) 주 : 강마야.김기흥.이도경(2020)의 "코로나19대응 시리즈 : 코로나19에 따른 농업.농촌 분야 접근관점의 변화와 대응방향(현안과제연구, 충남연구원)"를 일부 인용, 요약함.

<1.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 대응현황>

● 국내외 여건변화

- 국가 전체적으로 낮은 식량자급률로 인하여 식량안보(food security) 위기,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먹거리 위기를 경험하고 있음.
- 생산자 입장에서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고용인력 부족은 농가의 소득 및 경영 불안정 구조로 연계,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근본해결로 대두됨에 따라서 먹거리 중요성을 인식하는 중
- 전체적으로 농업.농촌의 근본체질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공감대 형성 계기가 되고 있음. 이에 대한 근거로서 최근 식량, 식품, 농산물, 먹거리 검색어 급상승 추이를 보임.

● 중앙정부 대응현황

-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로 수출진흥, 친환경농업, 재해보험정책, 농업금융정책 등의 영역에서 긴급대책을 마련하였지만 포스트 코로나19를 고려한다면, 현재까지는 근본적 대책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일시적, 한시적인 긴급지원 중심의 대책수준임.

● 충청남도 대응현황

- 충청남도는 2월부터 3월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농업분야 방역대책, 농업분야 피해대책, 수출 및 융자 지원, 특별지원 대책 등의 영역에서 긴급대책 마련하였고 4월부터 5월까지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함.
- 단기에는 농식품 소비판촉, 농촌인력 지원, 농어민수당 조기 집행, 농촌 경영안정 자금 지원, 농식품 해외마케팅 추진을 계획, 중장기에는 미래식량안보 대비 및 식량주권 회복, 언택트(Untact) 시대 대응한 농식품 유통체계 개편,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춘 미래농업 경쟁력 강화, 안심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 조성을 계획함.

● 포스트 코로나19에 있어서 농업·농촌 분야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 대응 필요

- 전 세계적으로 이미 저성장시대에 돌입,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사회현상에 대한 재점검와 검토의 시기를 맞이하여 이제 농업·농촌 분야도 새로운 정상(New Normal)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외면했던 농정개혁의 요구와 함께 근본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새로운 접근관점의 변화, 대응방향 도출을 요구받고 있기에 현재와 같은 임시방편 수준의 긴급지원대책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2. 충남도민패널 심층 설문조사 결과>

●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충남 내 기회와 위기에 놓인 직종

- 기회인 직종은 1순위가 농림어업 관련직, 위기인 직종은 1순위가 서비스 등 자영업 관련직(외식업, 관광업) 인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충남의 농업·농촌 분야가 처한 긍정적인 현상과 이미지, 부정적인 현상과 이미지

- 긍정적인 현상과 이미지로서 식품안전성 관심 고조·안전한 먹거리·식품위생 등 먹거리와 관련한 언급이 11건(17.5%), 부정적인 현상과 이미지로서 농업인력 부족·농촌일손 부족 등 인력부족과 관련한 언급이 16건(21.1%) 순으로 응답함.

●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충남 농업·농촌의 현재와 미래 중요도와 공익적 기능

- 충남 농업·농촌의 현재와 미래 중요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 할 것이라는 응답이 75%를 차지,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중요” 할 것이라는 응답도 16.7%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높음.
- 충남 농업·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공익적 기능은 “식량(농식품, 먹거리)을 안정적으로 공급” 이라는 응답이 75%를 차지, “자연환경·경관보전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 라는 응답이 12.5%를 차지함.

●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충남 및 시군 농정이 가장 근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 충남 및 시군 농정이 가장 근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농산물 유통, 가격을 비롯하여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 이라는 응답이 45.8%를 차지, “충남 지역먹거리 선순환구축을 위한 정책” 이라는 응답이 29.2%를 차지함.

●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주요 실행전략별 핵심내용(<표 1> 참고)

- 충남 지역먹거리 선순환구축, 농업·농촌 사람과 인력 해결, 농산물 유통·가격·소득 및 경영안정,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으로 이행, 농촌거주 사회적 취약계층 통합돌봄 등 5대 실행전략(정책)을 선정하게 됨.
- 객관식 설문조사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주관식 설문조사 분석결과에서는 주로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음. 생산과 소비의 연결, 유통, 교육, 농업과 복지의 연계 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주관식 설문조사 분석결과 핵심내용 요약

주요 실행전략(정책)	낱말구름(워드클라우드) 분석	의미망(네트워크) 분석
충남 지역먹거리 선순환구축을 위한 정책	먹거리를 중심으로 생산은 물론 교육, 소비, 유통, 가공 등	먹거리를 중심으로 먹거리 생산, 먹거리 유통, 먹거리 교육 등 이들 단어 간 상호 연관성 높음.
농업·농촌 사람과 인력 해결을 위한 정책	농업정책 지원, 농촌지역 일손 확보, 교육 및 기계화 투자, 외국인인력 수급 등	각 단어 간 연관성 부족함. 별다른 대책 아이디어 부족함.
농산물 유통·가격·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	지역 내 유통, 농산물 생산가격,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지원 등	지역 내 생산과 소비, 유통 구조를 중심으로 가격을 형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상호 연관성 높음.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으로 이행하는 정책	친환경 농축산업 생산, 농가지원, 교육, 소비자 인식, 기술개발, 시설기반 등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중심으로 소비, 지원 등이 연관성이 있지만 대체로 각 단어 간 상호 연관성은 미약함.
농촌거주 사회적 취약계층 통합돌봄 정책	취약계층, 사회적 농업, 교육, 지원, 복지 서비스 개선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업과의 연계, 복지구조 개편, 교육의 중요성, 사각지대 지원 시급 등 이들 단어 간 상호 연관성 높음.

주 : 저자 작성함.

● 충남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체별 역할

-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관련업계 종사자는 유통구조 개선, 적절한 유통마진, 적정가격 형성, 가공활성화 등 역할을 기대, 생산자는 친환경농산물 재배, 소비자를 생각한 농법 등에 역할을 기대함. 그리고 소비자는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관련소비에 관심, 가치와 상생에 대한 인식제고 등 역할을 기대, 행정은 지속가능한 행정, 체험활동 및 먹거리 교육 확대, 홍보 등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충남 및 시군 농정이 핵심적으로 변해야 할 것

- 지속가능한 농정 정책으로 변화(13명, 17.8%), 과감한 행정 혁신 지향(12명, 16.4%), 사회적 약자(소농) 보호 및 생활안정 지향(10명, 13.7%), 민관 거버넌스 확대(9명, 12.3%), 유통채널 다양화 및 스마트화기술 연계(7명, 9.6%), 환경친화적 생산방식으로 변화(7명, 9.6%), 기존 사업기준과 방식의 재점검(6명, 8.2%), 기술 연구개발(5명, 6.8%),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교류와 자원 순환(4명, 5.5%) 순으로 나타남.

● 5대 실행전략별 핵심내용을 감안하여 새로운 접근관점과 대응방향으로 전환 필요

- 충남 지역먹거리 선순환구축, 농업·농촌 사람과 인력 해결, 농산물 유통·가격·소득 및 경영안정,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으로 이행, 농촌거주 사회적 취약계층 통합돌봄 등 5대 실행전략(정책)을 “지속가능하게, 적극적인 방식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3. 접근관점의 변화와 대응방향>

● 새로운 접근관점으로의 변화 도모

- 일시적, 한시적 긴급대책이 아닌 새로운 정상(New Normal)을 향한 농정 전환과 사람중심 관점으로, 돌봄과 포용 관점으로, 환경과 생태의 관점으로 농정 변화 필요함.
- 먹거리 선순환, 농업인력, 소득 및 경영안정, 환경친화, 통합돌봄 등 대응방향 도출함.

● 5대 대응방향(정책)별 핵심문제에 따른 핵심방향, 핵심과제 제안, 전환 필요(<표 2> 참고)

<표 2> 5대 대응방향(정책) 핵심내용 요약

대응방향(정책)	핵심문제	핵심방향	핵심과제
충남 지역먹거리 선순환구축을 위한 정책	민관협치 운영 미흡	민관협치 및 컨트롤타워 구성과 운영	① 충남 도민들로부터 내외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
			② 충남 먹거리 정책추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민관협치 등 조직 정비
	조직 및 예산 등 각종 기반 부족	조직 및 예산 등 각종 기반 조성	③ 충남 먹거리 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기존 사업과의 통합, 연계를 통한 예산 확보
	조직화된 생산자 및 시민 부족	생산자 및 시민조직 양성	④ 충남 내 다양한 먹거리 생산기반을 통한 균형적인 품목자급률 달성, 생산자조직 및 소비자조직 기반 강화
			⑤ 충남 지역먹거리 꾸러미사업 정례화, 온라인 플랫폼 구축
			⑥ 조직 및 예산 등 기반이 완성된 이후 수요에 맞는 물적 기반 추진
충남 농업·농촌 사람과 인력 해결을 위한 정책	농업노동력 부족	농업인력에 대한 불편한 진실 공론화	① (임시방편 대책) 농작업지원단 지원사업 확대 및 농업인력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차액 지원
	고용노임비용 증가가 경영부담으로 연계	농업노동의 소중함에 대한 인정과 배려	② 3D 농작업의 ICT 기술 적용, 자동화 및 기계화 개발 투자, 저렴한 수준의 보급형 기술개발과 상용화
	열악한 농업노동환경	3D 농작업의 ICT 기술 적용과 기술개발 투자	③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확대,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농업 이행, 창농교육기관 기능, 중간코디네이터 양성
	농업인력 수급실태 미파악	농업인력 중장기 계획 수립	④ 충남 농업인력 수급 실태조사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농업인력 양성과 확보 계획 부재		
충남 농산물 유통·가격·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	저평가된 농산물 가격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의 가격안정제	① 농산물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의 가격안정제 도입

대응방향(정책)	핵심문제	핵심방향	핵심과제
	경영비 상승	유통 및 가공 등 판로 확보를 위한 다각화	② 유통·가공·소비까지 고려한 판로 확보 다변화
	농업소득 정체 혹은 하락	직접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	③ 기존 시장가격 왜곡하는 보조사업을 직접 소득지원 사업으로 개편
			④ 농업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기초실태조사, 정교한 소득 및 경영안정대책 수립
충남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으로 이행하는 정책	고비용·고투입 농법	저비용·저투입 농법 전환	① 화학재를 덜 사용하는 저비용.저투입 농법, 환경친화 농업으로 전환
	생산성 향상 농법	환경친화 농축산업 이행	② 지역의 환경부하량을 감내할 수준에서의 환경친화 축산업으로 이행
	환경 중요성 인식 미흡	지역단위 농업환경보전정책 확대	③ 경종과 축산의 연계를 통한 충남형 유기성 자원순환농업 구축
			④ 땅, 물, 공기 등 깨끗하고 안전한 지구환경을 위한 지역단위 농업환경보전정책 확대
충남 농촌거주 사회적 취약계층 통합돌봄 정책	농촌지역 복지사각지대	지역수요 맞춤형 돌봄	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 단위 돌봄을 통해 공공의 사각지대 최소화, 포용적 복지국가를 실현해가는 적극적인 지역 정책 발굴
	사회적 안전망 미흡	거버넌스형 통합 돌봄	② 농촌거주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 개발 및 연계
			③ 지역 단위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 도우미 인력체계 구성
	단편적 복지사업 실행	소통하는 주체로서 역할 부여	④ 농촌 지역의 자원인 농업생산활동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교육과 돌봄, 일자리 창출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과 연계 플랫폼 및 서비스 구축
			⑤ 행정구역 경계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광역돌봄체계 구성

주 : 저자 작성함.

<4. 충청남도 농정 추진기반 혁신>

● 충청남도 농정 추진기반 혁신을 위한 준비 필요(<그림 1> 참고)

- 충남 농정의 방향과 관점을 실행하기 위해서 농정체계 4대 혁신(틀)은 농정조직의 혁신, 농정예산의 혁신, 농정정보의 혁신, 농정주체 인식의 혁신이 필요함.
- ① 농정조직의 혁신을 위해서 다양한 인사제도 적극 활용 등을, ② 농정예산의 혁신을 위해서 소모성 및 생산성 향상 보조사업 일몰, 축소, 폐지 등을, ③ 농정정보의 혁신을 위해서 농업·농촌 행정정보 통합DB 구축 등을, ④ 농정주체 인식의 혁신을 위해서 뿌리깊은 패배의식 극복, 자존감 회복 등을 제안함.

<그림 1> 충남 농정체계 4대 혁신(틀)과 추진과제

4대 혁신	추진과제
① 농정조직 혁신	■ 다양한 인사제도 적극 활용(임기제공무원, 전문직위제 등) ■ 농정혁신에 기여한 팀에게 성과보상체계, 인사고과 반영 ■ 불필요한 업무 축소, 마을현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행정 ■ 농정관련 부서 및 기관 등 조직진단 ■ 업무와 역할 및 기능 재편, 행정인력 전문성 강화로 재편
② 농정예산 혁신	■ 소모성 보조사업, 생산성 향상 중심 보조사업 일몰, 축소, 폐지 ■ 공익 기능을 제고하는 프로그램 방식의 사업 확대 ■ 현물지원, H/W지원보다 사람에게 현금지원, S/W지원 강화
③ 농정정보 혁신	■ 농업·농촌 행정정보 통합DB 구축 ■ 농업·농촌 지방비 보조사업 통계DB 구축 ■ 기존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전수실태조사 ■ 통계와 정보에 바탕을 둔 과학적인, 신뢰받는 농정 설계
④ 농정주체인식혁신	■ 뿌리깊은 패배의식 극복, 자존감 회복 ■ 행정에 대한 불신 극복 ■ 민관 협치구조 작동을 위한 협업·연대 역량과 경험 축적 ■ 농업생산성 중심의 사고에서 사람 중심의 인식 전환

주 : 저자 작성함.

Ⅲ. 전문가 토론문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및 충남 농정시책구상 자문의견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김성훈

❑ 충남 농정의 방향 설정을 위한 keyword

○ 최근 발생한 “코로나19(COVID-19)”는 우리 충남 농업을 비롯한 전 세계 산업 및 사회에 전무후무(前無後無)하고 비가역적(非可逆的)인 변화를 유발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등은 농식품 유통 및 소비 감소뿐만 아니라 농업 · 관련 서비스 수요 급감, 도농교류 단절 등 다방면으로 부정적 영향 발생 중

- 언택트(untact)로 대표되는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환도 가속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코로나19 국면이 해소되더라도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

○ 농업과 농촌에 대한 그동안의 지원들에 대한 비농업권의 피로감이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당연히 도와줘야하는 부문”이라는 사회적 동의가 약화되고 있음.

- 1994년 UR협상 타결 이후 김영삼 정부부터 이른바 “119조 대책” 등 다양한 지원 및 육성 정책이 매년 시행되고 있는데, 그간 성과에 대한 비농업권의 회의적 시각이 대두

- 그동안의 산업화 및 공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희생되었던 농업과 농민에 대한 지원을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지속하여왔지만, 이미 25년이 지나면서 유통기한(?)이 끝나고 있는 상황

- 특히, 농민수당 등에 대해 불편한 시각을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중앙부처에서도 “언제까지 퍼줘야 하나?”라는 볼멘소리가 발생

○ 이상의 상황에서, 우리 충남도가 우리 농정의 방향 설정을 위한 키워드로 “새로운 길”과 “합의된 길”로 제안하고자 함.

❑ 2021년 충남 농정시책 구상을 위한 comments

○ 충청남도의 주요시책을 보면서, 현장에서의 깊은 고민이 엿보임. 다만, 비대면(untact), ICT 4차 산업, 한국판 뉴딜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길”에 해당되는 신규 사업이 잘 보이지 않아 추가적인 제안을 하고자 함.

- 신규 수요 창출 및 상품 홍보 등을 위해 대형 포털사나 온라인 몰 등과의 협업사업, 유튜버(YouTuber)와의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등을 도 차원에서 기획하여 시도하는 것이 가능

* 네이버의 제주감귤 판매 사례 등을 응용하거나, 충남 농산물 등을 아이템으로 하는 유튜브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것 등 가능

- 농어업회의소, 3농정책 위원회, 미래농정포럼 등이 앞으로의 “새로운 길”을 탐색하고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구성과 운영이 필요

* 기 운영 조직에 대한 성과 분석에 기초하여 의제(agenda) 선정, 전담 소위 구성 및 행정 참여, 과제 설정 및 결과물 도출 시한 설정 등의 사전 작업 필요

- 농업부문 4차 산업, 고부가가치 식품 등 신기술이 접목된 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우리 농업 및 식품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

* 농진청(신기술보급사업 등)과 협업하여 스마트 팜, 식물공장 등의 신농업 도입 추진

* 전북도, 전남도의 식품 R&D 인프라 구축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관련 정부사업 유치 노력

* 서산 부석농협의 농심 수미감자 사례 등 식품기업과 농업 연계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충남연구원의 제안 사업들을 보면서, 다양한 고민과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제안된 사업들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합의된 길”로 가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함.

- 충남형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수혜자 이외의 납세자들을 설득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기에 해당 사업의 당위성 및 가시적인 성과 계측 방안 등의 고민이 필요

  * 중앙정부 차원의 공익형 직불제 등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차기 선거를 위한 퍼주기 사업이라는 논란 유발 가능

- 미세먼저 저감 '해안림 - 농촌숲 - 도시숲' 체계사업의 경우, 투입 예산대비 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숲을 활용한 경관 자원 활용 또는 6차 산업과의 연계 등 추가 사업 구상 및 연계 필요

  * 투입 예산 규모가 작지 않고, 숲 조성 및 성과 계측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지 않아 사전에 면밀한 타당성 검증 필요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및 충남 농정시책구상 자문의견

농촌과 자치연구소 소장 정만철

❑ 전반적인 의견

❍ 최근 코로나19와 국제정세 및 사회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우리 사회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농식품산업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상황에서 농식품 생산 및 유통, 소비부문에 있어서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그 변화 양상에 대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 하지만, 충남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들이 많고, 시대 변화에 대응한 사업은 크게 눈에 띄지 않음.

❍ 또한 그 동안 3농정책위원회 등의 농업정책 거버넌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오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추진 사업에 대한 의견

❍ 농·특산물 직거래 '착한장터' 운영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납품 농가들의 안정적 소득보전 차원에서 2회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음.

- 농식품유통과의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농산물 마케팅 추진' 사업과 연계해 추진했으면 좋겠음.

❍ 농어업회의소는 설립이 목적이 아니라, 회의소의 정체성 수립이 우선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농어업회의소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과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기 설립된 지역과 신규 설립 지역 회의소 관계자의 지속적 역량강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임.

❍ 3농정책위원회와 미래농정포럼 등 농정거버넌스의 활성화를 통해 충남지역의 현실과 사회 상황에 적합한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충남도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건립은 충남도 광역푸드플랜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했으면 함.

❍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컸던 분야일 것임. 하지만 해외여행의 감소로 국내여행이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예상되면서 농촌체험이나 휴양마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도시민 유치를 위한 사전 준비 필요,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농촌활력과의 ‘HMR 생산경영체 지원’ 사업은 농식품유통과의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농산물 마케팅 추진’ 사업과 연계해 추진했으면 좋겠음.

❍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화력발전소 주변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과 국·공유지를 활용한 생활숲 조성은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됨. 하지만 이에 더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어린이와 도민이 활동할 수 있는 대규모 ‘충남도 실내식물원’ 조성 등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음.

※ 참고 : 마곡 서울식물원

❍ 충남은 양돈 등 축산 집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축산악취문제로 인한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충남도청 배후도시인 홍성군 홍북읍 일대의 신도시 지역은 악취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는 등 갈등이 심각한 상황임. 따라서 노후화된 축사의 폐업과 사조산업의 이전 등에 있어 충남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충남연구원에서 제안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민으로서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경제정책으로써 현 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됨. 농민수당 및 환경보전프로그램 등 충남도의 관련 예산 조정 등을 통해 농가소득보장 차원에서의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함.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마을 공동체 등)가 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 갔으면 좋겠음.

-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의 공동체 식당 설립은 고령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기능과 일자리창출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및 충남 농정시책구상 자문의견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대표 정민철

○ 중앙정부의 포스터코로나 대응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활성화(한국판 뉴딜)와 사회안전망 강화로 요약된다. 경제활성화의 방향이 디지털과 기후변화 대응인 것이다. 내용에는 농촌과 농업의 대응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변화를 수도권과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촌은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농촌에서 심각성의 체감 정도는 코로나 19보다 작년의 가뭄, 올해의 홍수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온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과 농업은 특별한 대응을 고민하지 못하는 하나의 이유일 수가 있다. 단순히, 중앙정부의 키워드가 디지털이어서 농촌의 디지털사회화(스마트농촌) 그리고 농업의 스마트팜이라는 식으로 연결할 것인가? 그린뉴딜이니 농촌 지역의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이야기할 것인가? 코로나19로 온라인 매장을 이용한 농축산물 구입 비중이 증가하니 온라인 판매 방식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확대 할 것인가? 코로나 19 이후의 현상은 도시보다 늦게 농촌에 파도가 밀려올 수도 있다. 또, 저밀도 사회에 대한 지향, 환경과 건강 그리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 증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 변화, 식량안보의 중요성 등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되는 지점에서 농업, 농촌이 어떻게 이를 기회로 만들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농업, 농촌을 기초로 하는 지자체의 포스트코로나 대응이다.

○ 경제성장률 감소에 따라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의 고용 충격의 여파를 농촌이 완충한다는 경험은 IMF와 금융위기 때 경험하였다. 즉, 경제 변화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도시가 더 많이 받고, 농촌은 국가의 완충 지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선 두 번의 경제 충격시기에 국가 차원에서 농촌이 사회적 완충 지대라는 공익적 기능을 했다면 농촌은 어떤 긍정적 결과를 얻었는가를 고민해봐야 한다. 우선, 농촌이라고 퉁쳐서 말하지만 군마다 그리고 군내의 읍과 면 간에도 그 간극은 매우 크다. 농촌의 읍과 달리 면은 저밀도를 수준을 넘어 코로나 19가 창궐하는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회적 거리 “좁히기“ 운동을 해야 할 정도이다. 인구 유입을 위한 여러 정책

을 수립, 집행했음에도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사회적 변화에 따른 농촌으로 진입하는 도시 사람들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환경, 건강, 안전, 공동체 등 중시로 저밀도 사회인 농촌지역 가치가 증대할 것이고 귀농,귀촌이 증대“와 농촌관광 횟수는 증가할 것(코로나 19대응 농업, 농촌부문 영향과 대응과제, 2020.08.0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설문결과 결과이고, 이전 경험에서 확인 된 것이다. 포스트코로나 19대응은 어쩌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잘 견디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 긍정적인 결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일까를 고민해보야 한다.

- 소멸형 일자리 사업이 아닌 농촌에 필요한 일자리 사업 / 군과 면을 연결하는 추진 체계 / 이를 총괄하는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 농촌환경을 혁신하는 사업 / 마을 단위 새로운 농촌환경 창조를 위한 통합형(일자리+기획+진행) 사업 / 농촌뉴딜
- 농촌형 생활 SOC 사업 / 생활체육, 생활문화 시설 등을 읍 중심 배치가 아닌 면 분산 배치 / 농촌 삶의 질 개선, 농촌뉴딜
- 농촌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 면 단위 청년 창업 지원 / 농촌지역경제활성화
- 소규모 중장기 생활형 농촌관광 사업 / 기존 대규모, 일회성, 단기, 농촌체험관광 체계의 재편 / 농촌 가치 향상

○ 포스트코로나 그린뉴딜 정책에 농업 분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은 가장 안타까운 일이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으로 가장 강조하는 것이 환경 분야임에도 차츰 농업이 환경을 파괴하는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탄소저감은 거스럴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농업은 탄소를 배출하는 양을 줄이는 활동과 더불어 대기 중 기후변화의 요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농업의 다기능 활동과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을 기준으로 한 생산 정책을 통해 매년 감소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공감대를 반등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EU와 같이 탄소제로, 농약 사용 50% 감축, 비료 사용 20% 감축, 항균제 50% 감축 등의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변화의 방향은 제시되어야 한다. 예로서, 부분경운, 녹비작물 및 농업자재 장기 활용 방안 등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농정 방향을 선도적으로 이끌었던 충남 농정이 공익형 직불금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시대적 역할로 인식했으면 한다.

○ 코로나 19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뀐 것 중의 하나는 식량안보와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인식 강화이다.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다. 농업의 입장에선 상반될 수도 있는 두 가지가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이다. 친환경농업은 특화작물과 같이 하나의 특별한 농업형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증 체계 등 여러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 지구조성을 통해 친환경농업 면적을 확대하자거나 유통활성화를 통해 농가 수입을 증가시키자는 등의 기존 접근 방법은 한계를 가진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친환경농업은 소수의 농민이 하는 것, 다수의 농민이 현재 실천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방향은 포스트코로나 대응으로는 맞지 않다.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 간다고 할지라도 농업과 환경이 함께 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는 바뀌지 않는다. 광역지자체의 지향은 시군지자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시대적 변화를 더 빠르게 인식 할 수 있는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이다.